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483-10

정책보고서 2018-93

#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김미곤·강지원

이상영·정영철·서제희·이기호·채수미·윤시몬·김성아·이예나

김신영·서보순·장현진·정익중·조동훈

**【책임연구자】**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 저서】**

중장기 사회정책 추진방향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지역 아동 돌봄 계획 수립 지원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공저)

다함께 돌봄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공저)

**【공동연구진】**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시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이예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서보순 동의대학교 교수

장현진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동훈 한림대학교 교수

## 제출문 <<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18. 6. 25.)한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 목 차

요약 .....	1
<b>제1장 연구 배경 .....</b>	<b>5</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7
제2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2017년 시행계획 평가 개요 .....	11
<b>제2장 평가지표 및 평가 절차 .....</b>	<b>15</b>
제1절 평가지표 개정의 필요성 .....	17
제2절 2017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개발 .....	21
제3절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	34
<b>제3장 2017년 시행계획 평가 결과 .....</b>	<b>37</b>
제1절 중앙부처 평가 결과 .....	39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48
<b>제4장 사례 연구 .....</b>	<b>73</b>
제1절 아동정책 및 성과의 국제 비교 .....	76
제2절 주요 체제전환국의 아동정책 현황 .....	85
제3절 소결 .....	92
<b>제5장 개선 방안 논의 .....</b>	<b>95</b>
제1절 차년도 평가 개선 방안 .....	97
제2절 차년도 시행계획 작성 및 평가(안) .....	105

---

참고문헌 .....	111
------------	-----

부록 .....	115
----------	-----

부록 1. 중앙부처 평가 양식 .....	117
------------------------	-----

부록 2. 지방자치단체 평가 양식 .....	118
--------------------------	-----

부록 3.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 .....	121
-------------------------------------	-----

## 표 목차

〈표 2-1〉 2016년 평가 항목 및 지표 요약 .....	18
〈표 2-2〉 중앙부처 평가 항목 및 지표 비교 .....	23
〈표 2-3〉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	24
〈표 2-4〉 지표 1-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	25
〈표 2-5〉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 .....	25
〈표 2-6〉 의견 수렴 실적의 제출 양식 .....	26
〈표 2-7〉 지표 3-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	27
〈표 2-8〉 지표 4-드림스타트 수혜율 .....	28
〈표 2-9〉 지표 5-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	29
〈표 2-10〉 지표 6-취학아동의 방과후돌봄 이용률 .....	30
〈표 2-11〉 지표 7-보호종로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실적 .....	30
〈표 2-12〉 지표 8-디딤씨앗통장 지원 실적 .....	31
〈표 2-13〉 지표 9-보호종로아동 주거 지원 실적 .....	31
〈표 2-14〉 지표 10-1-국가공모사업 참여 실적 .....	32
〈표 2-15〉 지표 10-2-아동친화도시 구축 실적 .....	33
〈표 2-16〉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료의 자료원 .....	33
〈표 2-17〉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자문 및 평가위원 워크숍 .....	35
〈표 3-1〉 2017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부처별 예산 및 집행률 .....	40
〈표 3-2〉 중앙부처 영역별 예산 규모 및 집행 현황 .....	41
〈표 3-3〉 중앙부처 지표별 평가 결과 .....	42
〈표 3-4〉 중앙부처 지표별 평가 결과 .....	42
〈표 3-5〉 중앙부처 영역별 평가 결과 .....	43
〈표 3-6〉 중앙부처 영역별 평가 결과 .....	44
〈표 3-7〉 중앙부처 영역별 평가 결과 .....	46
〈표 3-8〉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총괄표 .....	48
〈표 5-1〉 중앙부처 평가 절차-2016년(2015년 실적 평가) 기준 .....	98
〈표 5-2〉 중앙부처 평가 절차-2017년(2016년 실적 평가) 기준 .....	99
〈표 5-3〉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2016년(2015년 실적 평가) 기준 .....	101
〈표 5-4〉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2017년(2016년 실적 평가) 기준 .....	102
〈표 5-5〉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2017년(2016년 실적 평가) 기준 .....	103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	10
[그림 1-2] 정책 대상으로서 아동의 다양한 구분 .....	12
[그림 1-3]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 분포(유형화) .....	13
[그림 1-4]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 분포(영역) .....	14
[그림 2-1]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개발 및 의견 수렴 과정 .....	20
[그림 2-2] 중앙부처 평가 추진 체계 .....	34
[그림 3-1] 예산 및 집행률을 비교 .....	41
[그림 3-2] 영역별 평가 결과 비교 .....	45
[그림 3-3] 유형별 평가 결과 비교 .....	47
[그림 3-4]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시도 기준 .....	49
[그림 3-5]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별 분포: 시도 기준 .....	50
[그림 3-6]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표별 분포: 시도 기준 .....	50
[그림 3-7] '기획의 적절성' 평가 결과 .....	51
[그림 3-8] '추진 방식의 적절성' 평가 결과 .....	52
[그림 3-9] '성과달성도' 평가 결과 .....	52
[그림 3-10] '기반 구축' 평가 결과 .....	53
[그림 3-11]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축 .....	54
[그림 3-1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	55
[그림 3-13]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	56
[그림 3-14]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	56
[그림 3-15] 취학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이용률 .....	57
[그림 3-16]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실적 .....	58
[그림 3-17]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과 매칭금 .....	59
[그림 3-18] 보호종료 아동 주거 지원 .....	60
[그림 3-19] 지방이양사업 비교 .....	61
[그림 3-20] 국가공모사업 참여와 아동친화도시 구축 실적 .....	62
[그림 3-21] 전년도 평가 결과 비교 .....	63
[그림 4-1] 주요 국가의 노인 및 아동 빈곤율 .....	75
[그림 4-2] 주요 국가의 가족 지출 구조 .....	76
[그림 4-3] 주요 국가의 공교육 및 사교육 분야 지출 구조 .....	77



[그림 4-4] 주요 국가의 아동 연령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	78
[그림 4-5] 주요 국가의 아동 연령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	78
[그림 4-6] 주요 국가 보육서비스의 아동 대 교사 비율 .....	79
[그림 4-7] 주요 국가의 영아사망률 .....	80
[그림 4-8] 주요 국가의 아동 예방접종률 .....	80
[그림 4-9] 주요 국가의 아동 상대빈곤율 .....	81
[그림 4-10] 주요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 .....	82
[그림 4-11] 주요 국가의 15~29세 청년 니트(Net) 비율 .....	83
[그림 4-12] 아동 삶의 질 수준 .....	83
[그림 4-13] 주요국의 아동정책 노력과 아동의 행복 수준 .....	84
[그림 4-14] 주요 체제전환국의 가족을 위한 사회지출 수준 .....	86
[그림 4-15] 주요 체제전환국의 합계출산율 .....	87
[그림 4-16] 헝가리의 아동가족 정책 구조 .....	88
[그림 5-1] 차년도 중앙정부 평가 절차(안) .....	100
[그림 5-2] 차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안) .....	10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7년 사업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2016년(2015년 기준)에 시범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2017년(2016년 기준) 평가가 진행되었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2018년(2017년 기준)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를 하였다.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제출한 2017년 추진 실적을 토대로 영역별 평가를 하였으며, 기획-집행-성과 등 단계별로 진행하였다. 특히 시행 3년 차를 고려하여 성과달성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기획의 적절성 등 시행계획의 충실성 중심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가 비중을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표 1〉 2016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

항목	중앙정부 평가지표(배점)		항목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배점)	
기획의 적절성 (20점)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	10	기획의 적절성 (10점)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10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계획의 집행도 (30점)	예산집행률	20	추진 적절성 (20점)	수립 절차의 적절성	10
	추진계획 이행도	10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10
성과 달성도 (50점)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성과 달성도 (60점)	드림스타트 수혜율	10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10
	성과지표의 신뢰성	10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	10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20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	20	기반 구축 (10점)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10
				아동친화도시 구축	5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5

## 2. 주요 연구 결과

중앙정부의 아동정책은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2) 건강한 삶, 3) 안전한 삶, 4) 함께 하는 삶, 5)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의 5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2017년 기준 15개 부처에서 약 4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평균 94.3% 집행되었다. 중앙부처의 평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계획의 집행도와 성과달성도가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표 2〉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중앙부처 평가 항목

	계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계
2016년	26.9점(89.6점)	22.1점(73.6점)	25.4점(63.5점)	100점(300점)
2017년	17.4점(87.0점)	25.9점(86.3점)	36.1점(72.2점)	100점(300점)

둘째,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표 3〉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중앙부처 영역

5대 영역	영역별 정책 방향	2017년	2016년	2015년
1. 미래를 준비하는 삶	누리과정 내실화,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아동이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에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84.1점	77.6점	71.8점
2. 건강한 삶	정신건강관리 인프라 확충, 생활습관(비만) 관리, 아동 예방접종률 향상 등 아동 건강관리 체계 마련	77.5점	72.1점	55.6점
3. 안전한 삶	아동학대, 불량식품 등 아동기 안전 위해 요인에 대한 대응 마련	79.7점	75.6점	61.6점
4. 함께하는 삶	방과후돌봄 체계 정비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빈곤, 장애, 다문화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 대책 마련	78.7점	74.1점	71.7점
5. 실행 기반 조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 등 아동 권리 실현 기반 마련	76.4점	72.4점	66.0점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총점을 기준으로 자치단체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광주와 전북 등이 우수하다. 전년 대비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 전남

과 경북의 시행 실적이 향상되었다. 올해 처음 실시한 시군구 평가에서는 전북 완주군과 강원 화천군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표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기획의 적절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8.9/10점). 특히 서울과 전북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 기획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추진 방식의 적절성은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12.5/20점). 서울과 경기, 전북, 광주·경북은 아동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의견 수렴에서, 대전과 경기, 전남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비해 성과달성도는 전반적으로 미흡(37.1점/60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남과 충북, 세종, 경기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반 구축 역시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6.3/10점).

〈요약표 4〉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

기획의 적절성	추진 방식의 적절성	성과달성도	기반 구축
8.9점/10점	12.5점/20점	37.1점/60점	6.3점/10점

### 3. 결론 및 시사점

2017년 기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업무 담당자의 자문 등을 통해 차년도 평가 개선 방안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계획 4년 차임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의 차년도 평가는 1) 평가 절차는 단순화하되 2) 평가지표의 엄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 절차는 2017년 기준을 유지하되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 및 지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사유를 제외하면 자료 미제출로 처리하여 평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차년도 평가는 1) 기초자료 사실 확인 강화, 2) 평가자와 자치단체의 상호 의견 수렴 강화, 3) 성과달성도의 지표 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8년 신규 도입된 아동수당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포함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평가지표가 중앙부처의 사업 성과달성도와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주요 용어: 아동정책, 법정 계획, 성과관리, 평가



# 제 1 장

## 연구 배경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2017년 시행계획 평가 개요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 목적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sup>1)</sup> 이를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연계·조정 및 통합 관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동법 제8조)하는데, 2015년에는 시행계획에 대한 시범 평가를 하였다. 평가 연도의 직전 연도 시행계획 평가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제1차 기본계획의 수립과 2015년 시행계획의 수립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계획 수립의 정보 수집과 작성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둘째,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실적 점검 위주로 이뤄져 지역별 여건과 특색이 고려되지 못했다. 셋째,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 및 사업 관리의 개선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의 비중을 강화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인 사업의 개선 및 아동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 결과의 활용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차년도 평가계획과 차기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7조이다.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가. 연구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를 위해 평가지표를 수정·보완했다. 평가지표는 전년도 평가위원 및 사업 담당자의 의견 수렴, 평가 결과의 분석 및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였다. 평가지표는 전 년과 동일하게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였다. 평가 자료의 작성과 평가 시행 의 시간 간격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평가지표는 가급적 평가 자료를 수정·보 완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정하였다.

둘째, 평가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통계 및 사업별 실적 자료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평가지표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평가에 활용된 자료 는 원칙적으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이다. 예산 및 성과지표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 하였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및 지원단 홈페이지 등 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셋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바 탕으로 분석을 하였다. 중앙부처의 평가 결과는 영역별로 이루어졌고,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결과는 시도별로 이루어졌다.

넷째, 이러한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차년도 시행계획 평가 및 차기 아동 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개선 방안들을 제안했다.

### 나.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방법은 평가지표의 개발 및 개선 방안을 위한 것과 평가를 위한 것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평가지표의 개발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 기초자료에 대한 분석 등을 하였다.

평가지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한다. 먼저 중앙부처의 평가는 각 부처 및 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예산 및 성과지표의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개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열린 재정’ 홈페이지와 함께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7년 부처별 소관 사업 예산 및 예산 설명 자료’ 등을 활용하고, 성과지표 달성도에 대한 검토는 자료의 출처 확인 등을 통해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정확성을 파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이와 함께 성과 중심의 이행 관리를 위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출했을 때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성과지표 평가를 위한 평가 자료를 공식적인 경로로 제출한다.

다음으로 평가를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평가를 한다. 평가계획은 평가지표와 평가 방법, 평가 절차 및 평가 일정, 평가위원 구성 등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설명회를 연다. 또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원내 외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단을 구성한다. 평가위원은 중앙부처 평가 지침 설명회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침 설명회에 참석하여 당해 연도 평가 지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를 통해 평가위원 간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평가는 세 단계에 걸쳐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제시된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토대로 평가위원들이 배정된 사업에 대해 사전 점검을 한다. 이에 대한 수정 보완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줌으로써 자료 작성 시점과 평가 시점의 간격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자 한다. 2단계에서는 수정 보완된 평가 자료에 대한 평가를 한다. 중앙부처는 서면 평가로, 지방자치단체는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각각 진행한다. 그런 다음 평가 결과는 안전을 통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공식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는 2단계 이후 신청에 따른 컨설팅을 추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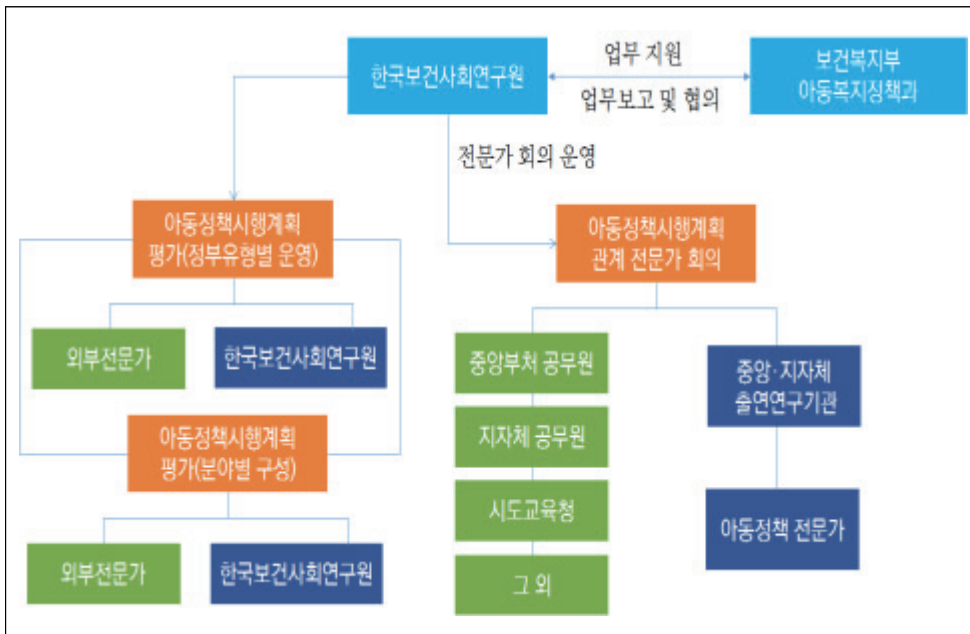
확정된 평가 결과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안전으로 제출하였고, 차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3. 연구 수행 체계

이 연구는 평가 준비와 평가 수행을 위해 각각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평가 수행 체계를 구축하여 2단계에 걸쳐 평가했다. 1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진을 정책 분야별로 각각 배치하여 기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1차 평가를 했다. 2단계에서는 1차 평가 후 기제출 자료에 변동 사항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이의 제기 및 소명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평가단이 2차 평가를 수행했다.

한편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지표 설정(배점)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와 아동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을 위해 아동 관련 연구자와 아동정책 시행 추진체계의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했다.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 제2절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2017년 시행계획 평가 개요<sup>2)</sup>

### 1. 정책 대상

우리나라의 「민법」은 19세 이상부터 성년으로 인정한다.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명명한다. 이를 연령 기준으로 세분화하면 신생아기와 영유아기, 아동 및 청소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서로 배타적인 정책 대상은 아니지만, 소관 법령에 따라 연령 기준에 차이가 있다.<sup>3)</sup>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정책 대상에게 동일한 목적을 제공하기 위해 수립된 아동정책이라고 해도 사업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해 명명하고, 소관 부처 및 전달체제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유사하게 학령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아동은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학교 밖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학교 체계에서 사용하는 구분이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보호 수준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가정 내에서 보호되는 아동과 가정 외에서 보호되는 아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에 대한 지원은 다시 혈연가정(원가정)과 비혈연가정(입양, 위탁)으로 구분<sup>4)</sup>할 수 있다. 가정 외의 지원으로는 시설 지원과 아동의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정책은 아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정책은 연령 기준과 학령 기준, 보호 기준에 관계없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아동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전(全) 사업을 포함한다. 이들 사업은 때로 유사하기도 하고 때로 경쟁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으로 미래 세대인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공통의 목표가 있다.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범위 역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고 정책 대상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정책 과제에 따라 임산부 및 18세 이상

2)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오윤섭 외(2017)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3)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며,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에 따르면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원가정은 ‘출가하거나 입양되기 이전의 원래 가족’(국립국어원 우리말샘, 2017. 10. 10. 추출)을 뜻한다. 이러한 용어는 ‘혈연’을 기준으로 한 구분(예: 혈연가족 vs. 비혈연가족)에 비해 중립적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대구(對句)는 ‘입양가정 혹은 위탁가정’으로 명한다.

청소년도 일부 포함하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아동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2] 정책 대상으로서 아동의 다양한 구분



주: 오윤섭 외(2017)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2. 정책 내용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가족·보육·교육·문화·여가·체육·건강·안전·복지·산업 등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데, 이러한 정책 범위의 확대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과 지역사회, 사회 환경과 관련한 사업들도 포함”하고 있다. 즉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한다(관계부처합동, 2013).

아동정책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아동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을 모두 포함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아동에게 직접 교육과 보육, 돌봄 등을 제공하는 사업들이 포함된다. 아동을 고려해야 하는 정책은 안전과 건강, 문화 등의 사업에서 별도로 아동을 고려하는 사업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정책의 대상과 내용 범위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즉 정책 대상은 직접적인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부모 혹은 가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의 집행 역시 공식적인 ‘시설 및 기관’과 비공식적인 ‘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동정책 기본계획의 정책 내용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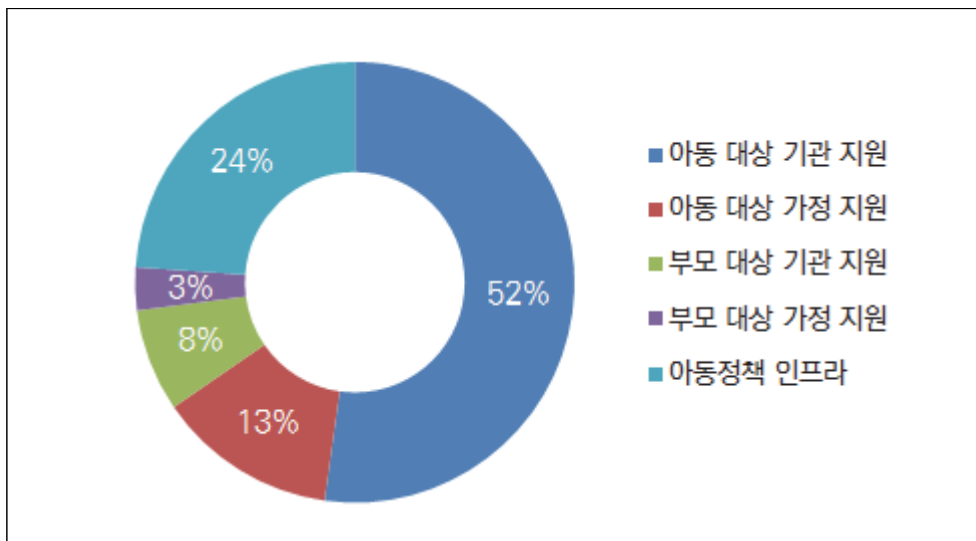
5) ‘시설 및 기관’을 ‘공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설의 설치 및 종사자 기준 및 배치’를 충족하는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그 반의적인 강조를 위해 ‘가정’을 ‘비공식’으로 구

상(아동 vs. 부모)과 공간(기관 vs. 가정)을 기준으로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오운섭 외, 2017, p. 15).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를 분석한 결과 정책 대상이 아동이며,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sup>6)</sup>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책 대상이 아동이지만, 가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sup>7)</sup>은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동에게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가족을 정책 대상으로 하지만, 기관을 지원하는 사업<sup>8)</sup>은 8%를 차지하며, 부모 및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sup>9)</sup>은 3%에 불과하다. 이 외에 직간접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지역사회 등을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인프라 구축 사업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3]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 분포(유형화)

(단위: %)



주: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과제 161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나타낸 것임.

분하였다.

6) 대표적인 사업은 국공립 보육시설 및 직장 어린이집 지원, 방과후돌봄 체계 정비 등이다.

7) 대표적인 사업이 가정양육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등이며, 2018년 평가에는 아동수당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8) 가족친화기업,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주로 가족친화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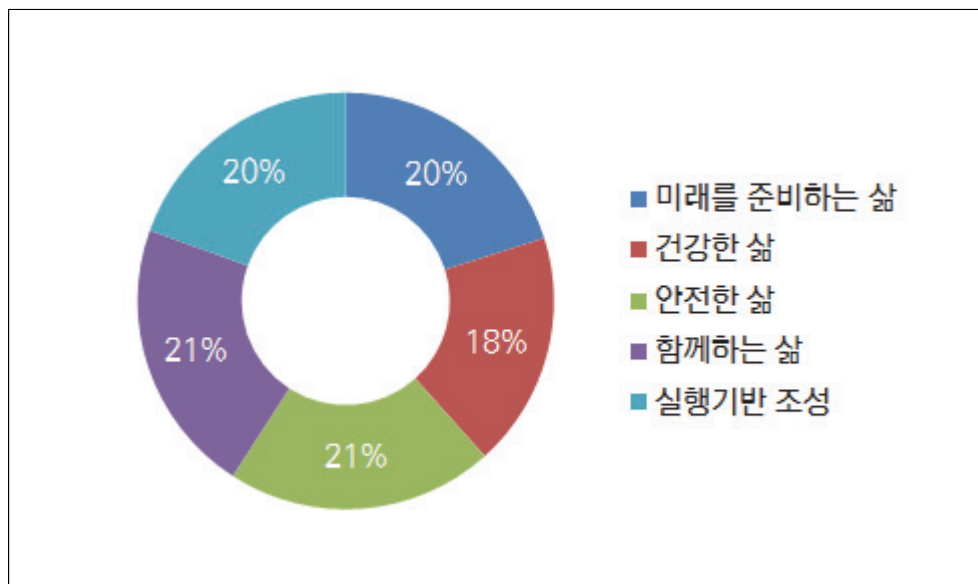
9) 임신·출산 지원,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사업의 정책 목적을 중심으로 5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에는 아동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소양과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건강한 삶’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체 발달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안전한 삶’에는 재난과 일상적인 안전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함께하는 삶’은 가족, 지역 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 아동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사업이다. 마지막으로 ‘실행 기반 조성’ 사업에는 아동정책의 추진체계 및 홍보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영역별로는 미래를 준비하는 삶(20%), 건강한 삶(18%), 안전한 삶(21%), 함께하는 삶(21%), 실행 기반 조성(20%)이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과제 분포(영역)

(단위: %)



주: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총과제 161개를 기준으로 비율을 나타낸 것임.



## 제 2 장

# 평가지표 및 평가 절차

제1절 평가지표 개정의 필요성

제2절 2017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개발

제3절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 2

## 평가지표 및 평가 절차 <<

### 제1절 평가지표 개정의 필요성

#### 1. 평가지표의 개발<sup>10)</sup>

정부는 아동정책 전반에 걸친 질적 수준 제고 및 체감도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여 범정부 차원의 종합 정책인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해야 한다(제8조).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오윤섭 외(2017)는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실제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재정사업 평가와 사회보장 기본계획 성과 평가 등의 지표를 검토하였고, 다섯 개의 주요한 원칙에 따라 평가지표를 도출했다.

첫째,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의 특성상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기획 의도를 존중했다. 아동정책에 포함된 개별 사업들은 각 소관 부처에서 본래의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따라서 정책 대상인 아동이 모두 포함되거나, 일부만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사업일 수도 있으며, 건전한 양육 환경을 위한 사회문화적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정책 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의 자율성을 존중했다. 개별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정책은 다양한 재원과 다양한 전달체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다. 때로 다양한 사업 간 연계나 통합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각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전달체계를 활용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

10) 이 평가에서 사용된 평가지표의 대부분은 전년도 지표를 반영한 것으로 오윤섭 외(2017)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설계했다. 따라서 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 본연의 설계에 대한 평가는 자제했다.

셋째, 모든 사업은 근거에 기반을 두어 설계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의 사업이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고,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아동정책의 수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은 과거에는 정책의 수동적 수혜 대상으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인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동은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성인이 돼 가는 과정에 있다. 아동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아동을 대리하는 부모나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정책은 균형성이 중요하다. 부처 간,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과 욕구 등에 대한 반응이 균형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오윤섭 외(2017)에서는 중앙부처의 평가지표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16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였다.

〈표 2-1〉 2016년 평가 항목 및 지표 요약

항목	2016년 중앙부처		2016년 지방자치단체	
기획의 적절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0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10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	10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10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핵심 사업 선정 여부 및 선정의 합리성	10
계획의 집행도	예산집행률	15	수립 절차의 적절성	10
	추진계획 이행도	15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10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아동복지예산 투입률	10
	성과지표의 신뢰성	10	아동복지 전달체계 운영	10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10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10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10
			요보호아동 주거 지원	10
가점			아동친화도시 구축	2

자료: 오윤섭 외(2017), p. 41, p. 48 재구성.

## 2. 평가지표 수정의 필요성

2016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몇 가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중앙부처의 평가지표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정책은 다양한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부처들의 사업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의 수행 및 관리를 위해 민간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 결과 예산의 추진 실적 작성이 매우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예산 항목은 전년도 예산액과 당해 연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증감이 제시되어야 한다. 실행행률은 전년도 집행액과 당해 연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2016년에는 제출한 예산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나, 일부 사업은 예산을 중복적으로 작성하였다. 일부 사업은 자료 제출 당시와 평가 시점의 시간차로 인해 변경된 예산 내용을 수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 평가에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을 실제 집행 기준으로 수정·보완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둘째, 예산과 성과지표의 미제출 사업에 대한 적용 문제가 대두되었다. 2016년 추진 실적 평가에서는 비예산 사업의 경우 일괄적으로 예산 사업의 평균을 적용했다. 그러나 평가 이후 확인한 결과 일부 사업은 사업 예산서상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서만 ‘비예산’으로 작성하거나 예산 항목과 예산 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7년 평가에서는 비예산 사업에 대한 차등 적용 방안이 제안되었고, 비예산 사업이 실질적인 비예산 사업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성과지표 미제출 사업에 대한 배점 조정 문제도 대두되었다. 성과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의 상당 부분은 내역 사업이거나 비예산 사업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다만, 일부 사업은 예산 사업이고 성과계획서 및 재정 사업 평가에서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있음에도 ‘해당 없음’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미제출한 사업은 예산 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성과지표 미제출에 대한 점수 조정을 차등으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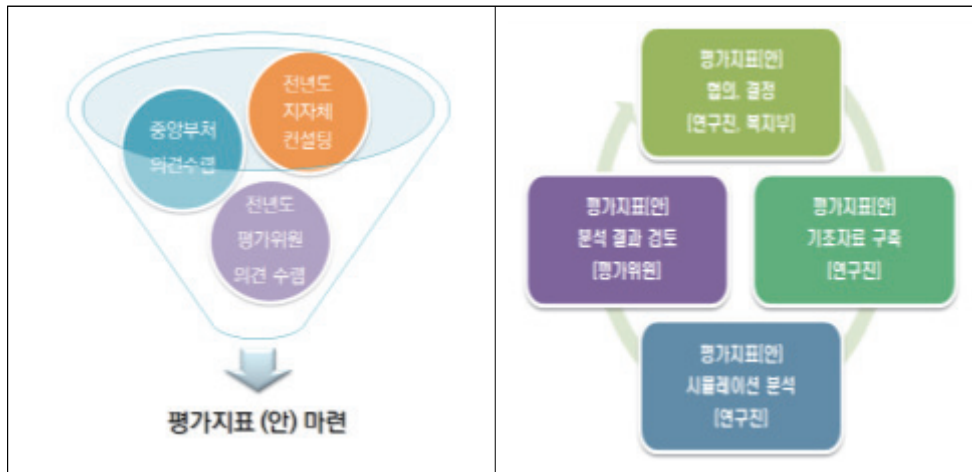
셋째, 사업 시행이 중단기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획의 적절성 지표 점수가 조정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계획의 집행도와 성과달성도의 계량화된 지표 점수

배점을 증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은 기본계획 작성 직후 시행 초기에 적합한 지표로, 시행 3차 연도에 접어들면서 점수의 편차가 없어 변별력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는 국비지원사업과 국비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구성하였으나, 새롭게 도입된 국비보조사업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예산은 이미 2016년에 편성되었으므로 일부 국정 과제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공모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을 추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 중 투입 중심의 정량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부양 인구 같은 재정 제약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평가지표는 시군구의 유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sup>11)</sup> 이와 함께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에 대한 평가지표 반영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에 대한 수정·보완을 하였다.

〔그림 2-1〕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안) 개발 및 의견 수렴 과정



11) 특히 시도별 총점이 시군구의 합산 자료에 의해 결정되는 지표의 경우 이러한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드림스타트는 아동 수가 적은 군 지역에서 전담 조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인 반면,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전담 조직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군 지역이 많은 시도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다.

## 제2절 2017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개발

### 1. 중앙부처 평가지표

2017년 시행계획 평가에서 중앙부처의 평가지표는 지표의 단순화와 배점의 조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획의 적절성 지표가 30점에서 20점으로 감소하면서 한 개 지표가 제외<sup>12)</sup>되었고, 예산과 성과지표의 배점이 확대되었다.

‘기획의 적절성(정성평가, 20점)’ 지표는 1) 이전 연도 시행 실적 반영, 2)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으로 측정한다. 1)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은 10점 만점 지표로 측정하는 정성 지표로, 평가기준은 2016년 추진 실적의 작성 여부와 전년도 추진 실적, 2017년 추진 내용의 관계이다. 대부분 2016년과 2017년 사업 내용 간 관련성이 깊으나,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소극적으로 변하는 사업도 있다.

2)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은 10점 만점 지표로 측정하는 정성 지표로, 평가기준은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의 연계,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연계 여부이다. 각 항목이 일관되게 연계되는지를 측정하는데,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 내용, 사업의 추진 전략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정성 평가의 측정에 한계가 있다.

‘계획의 집행도(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10점)’는 정량 지표인 1) 예산집행률과 정성 지표인 2) 추진계획 이행도를 통해 측정한다. 1) 예산집행률의 평가기준은 2017년 시행계획에 작성된 예산 항목과 예산액, 2018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에 작성된 2017년 예산의 집행액으로 평가한다. 예산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2017년에는 평가지표가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비예산으로 작성된 사업은 부처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전수조사하고, 전년도 평가 자료와 대조하여 실제 비예산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실제로 비예산인 사업의 경우 예산 사업의 평균(2017년, 15점)을 적용했다. 반면에 실제로 비예산 사업이 아니거나 예산이 잘못 작성된 경우 해당 부처에 수정 보완 의견을 전달하였고, 수정된 자료를 반영하여 평가하였다. 다만, 사업 집행의 성격상 예산 집행액 산출이 불가한 1개 사업은 8월까지의 집행 실적을 확인하였으므로 예산 사업의 평균

1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표는 시행계획의 최초 단계에서 적합한 지표이다.

점수 67%(10점)를 적용하였다.

2) 추진계획 이행도는 10점 만점의 정성 지표다. 평가기준은 추진계획의 실행 가능 성과 추진체계의 적합성이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 체계와 관리 체계 등을 구축한다. 전달체계가 명확한 경우 사업 추진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 주체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의 실행 가능성이 높다.

‘성과달성도(정량평가 50점)’ 지표는 1)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과 2)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3) 성과지표의 신뢰성, 4) 성과지표의 달성 정도로 구성된다. 1)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은 10점 만점 지표다. 평가기준은 성과지표와 해당 사업의 범위, 타 법령 계획 성과지표와의 비교를 통해 이뤄진다. 즉 사업의 성과지표가 해당 사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의 일부만 측정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다.

2)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은 10점 만점 지표다. 평가기준은 성과지표의 목표치의 설정으로, 사업의 예산 규모나 유사 사업의 목표치, 전년도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지를 판단했다. 예를 들어 전년 대비 10%의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목표치가 전년 대비 상승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유사하게 운영되는 타 부처 사업의 경우 사업의 소관 부처와 전달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사업의 목표치는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숙에 따른 효율과 효과의 자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전년도 성과에 비해 적극적인 목표 달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3) 성과지표의 신뢰성은 10점 만점 지표다. 성과지표는 ① 통계 작성 기관에서 생산하고, ② 승인 통계이며, ③ 통계 작성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산식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확인을 위해 평가위원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e-나라지표’,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공식 통계 홈페이지 등을 확인했다. 다수의 사업에서 성과지표가 내부 자료 혹은 보고 통계, 위탁 기관의 보고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료들은 객관성이나 자료의 공개 등에 한계가 있어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4) 성과지표의 달성도는 20점 만점 지표로 측정된다. 이는 전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당해 연도 시행계획에 제시된 달성도의 비율을 통해 계량적으로 측정한다.

사업이 여러 개의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 성과지표도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를 산출하고, 지표값은 합산해 제시한다. 즉 지표별 점수는 지표 선정의 적정성+목표치의 적정성+지표의 신뢰성+지표



달성도로 산출하며, 지표별 점수에 지표 가중치를 곱한 후 합산해 산출한다. 다수의 성과지표가 제시된 사업의 일부는 가중치의 합이 1이 되지 않아 지표 작성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과지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성과지표가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내역 사업의 경우 성과지표가 작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년도에는 성과지표에 ‘해당 없음’이라고 작성된 경우 성과지표 달성도의 평균 점수를 적용하였으나, 예산 사업과 비예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차등 적용했다. 즉 비예산 사업이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평균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2017년, 28점), 예산 사업이면서 성과지표를 개발하지 않은 사업은 사업의 추진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평균 점수의 70%(2017년, 20점)를 적용하였다.

〈표 2-2〉 중앙부처 평가 항목 및 지표 비교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획의 적절성 (20점)	①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	10
	②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	10
계획의 집행도 (30점)	① 예산집행률	20
	② 추진계획 이행도	10
성과달성도 (50점)	①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10
	②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③ 성과지표 신뢰성	10
	④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	20

## 2.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평가는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역시 기획의 적절성과 추진 방식의 적절성, 성과달성도로 측정한다. 전년도 평가지표에 비해 기획의 적절성 지표의 배점이 감소하였고, 성과달성도 지표의 배점이 높아졌으며, 기반 구축 점수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기획의 적절성(10점), 추진 방식의 적절성(20점), 성과달성도(60점), 기반 구축(10점)으로 구성된다.

〈표 2-3〉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획의 적절성 (10점)	①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10
추진 방식의 적절성 (20점)	① 수립 절차의 적절성	10
	②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10
성과달성도 (60점)	① 드림스타트 수혜율	10
	②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률	10
	③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	10
	④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20
	⑤ 요보호아동 주거 지원	10
기반 구축 (10점)	①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실적	5
	② 아동친화도시 구축	5

주: 굵은 글씨는 변경 사항임.

‘기획의 적절성’은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부합’으로 측정하는 10점 만점의 정성 지표이다.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부합성은 지역 여건, 추진 목표 및 방향, 추진 전략을 충실히 작성했는지 여부와 각 평가 요소 간 연계 및 부합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때 지역 여건은 아동 인구, 요보호아동 인구, 아동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아동정책 관련 수요·공급을 뜻한다. 추진 목표 및 방향은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제시된 비전과 목표, 지역 여건을 기반으로 수립된 각 시도의 고유한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뜻한다. 추진 전략은 영역별 혹은 사업별로 구체화된 실행 전략(action plan)을 뜻한다. 평가

요소(세 개)를 모두 충족한 경우 9점, 2개만 충족하는 경우 7점, 한 개만 충족한 경우 5점, 모두 미충족하는 경우 3점, 미제시한 경우 0점으로 측정한다. 그런 다음 각 요소 간 연계 및 부합 정도에 따라 0~2점을 측정하여 지표 점수를 산출한다.

〈표 2-4〉 지표 1-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평가 요소	측정 내용	측정 방법
① 지역 여건	아동 인구(연령, 가구 특성 등), 아동 관련 시설(학교, 양육시설 등)의 정원 및 현원 등	세 지표 모두 작성: 9점 두 지표 작성: 7점 한 지표 작성: 5점 모두 미작성: 3점
② 추진 목표 및 방향	지역 여건에 근거한 목표와 방향(1년 단위)	
③ 추진 전략	영역별, 사업별 구체화된 전략	
④ 연계 및 부합	①~③ 내용의 일관성 및 부합	0~2점

다음으로 ‘추진의 적절성’은 1) 수립 절차의 적절성과 2) 아동정책 추진체계 구축으로 구성된다. 1) 수립 절차의 적절성은 2017년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수렴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의견 수렴 대상은 아동 및 학부모 3점, 일반 주민 2점, (민간)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1점, 공무원만 참석하는 경우 0점으로 측정한다. 의견 수렴 실적은 횟수와 의견 수렴 대상의 곱으로 산정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한 경우 최고 점수를 적용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의회에서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 검토하였고, 안전 보고를 위해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청소년 의원들이 참여했다면 의견 수렴 대상은 3점을 적용한다.

2017년에는 시도와 시군구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향후 시도 및 시군구의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2-5〉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

평가 요소	측정 내용	측정 방법
① 의견 수렴 대상	아동 및 학부모 3점 일반 주민 2점 (민간)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 1점 공무원만 참석 0점	횟수 *대상별 점수 *의견 수렴 대상이 다양할 경우 최고 점수 적용
② 의견 수렴 실적	지역 여건에 근거한 목표와 방향(1년 단위)	

실적의 정확성을 검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실적 제출 양식을 작성한다. 증빙 자료는 대면 평가 시 평가위원이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증빙 자료 미제출 등의 사유로 실적 자료에는 제출하였으나, 평가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표 2-6〉 의견 수렴 실적의 제출 양식

① 주체	② 일시	③ 장소	④ 참석 대상	⑤ 행사명	⑥ 증빙 자료 1. 있음 2. 없음
1. 시도명					
2. 시군구명					
3. 시군구명					
(예시) 1-1. 복지시	2017. 1. 20. 11:00	시청 5층 대회의실	0, 1, 2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회의	1
(예시) 1-2. 복지시	2017. 1. 22. 14:00	시청 5층 대회의실	0	아동정책 시행계획 보고	1
(예시) 2-1. 보건구	2017. 1. 10. 14:00	중회의실	0, 1	2016년 아동정책 시행계 획 설명회	1

주: ④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이 작성함. 0 공무원, 1 전문가/관계자, 2 일반 주민, 3 아동/학부모.

2) 아동정책 추진체계 구축은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과 ②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실적은 시도(2점)와 시군구(8점)로 구분하여 점수를 측정하였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은 횡수로 측정했다. 다만 의견 수렴 실적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은 근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대면 평가 시 회의록 및 결과 보고서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인정 여부를 결정했다.

이 지표의 산정 시 두 가지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첫째,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아동돌봄심의위원회 혹은 아동친화도시심의위원회를 만들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와 병합해 운영한 경우 이를 인정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시만 있거나 시군구가 없으므로 시군구의 점수는 평균 점수를 적용하였다.

〈표 2-7〉 지표 3-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구분	①지자체 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표값	
		②구성	③실적	산식	점수
시도	1	b	c	b+c	f
시군구(계)	a	d	e	$(d/a)*4+(e/d)*4$	g
A구					
B구					
C구					
D구					
E구					

주: b와 c는 각 0~1점, f는 0~2점, g는 0~8점.

마지막으로 성과달성도는 1) 드림스타트 수혜율, 2)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3) 취약아동 돌봄 공공성, 4)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5) 요보호아동 주거 지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1) 드림스타트 수혜율은 시도 내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운영 실적으로 평가한다. 드림스타트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이다. 지원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다. 둘째, 인적 조사 및 사정을 통해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셋째,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원 자원 발굴 및 관리이다(보건복지부, 2017 아동사업안내Ⅱ).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군구별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시군구에 설치하며, 전담 공무원과 아동통합사례관리사(민간 전담 인력)으로 구성한다. 이때 전담 공무원은 팀장(6급 이상 공무원)과 최소 3인(사회복지, 간호·보건, 보육, 행정)으로 구성한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기본 4명이 배치되나, 취약계층 아동 수를 고려하여 7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7 아동사업

안내II).

이 연구에서 드림스타트 구축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전담하는 팀이 시군구 조직도에 명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소속 인원이 전담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이는 전담 공무원 배치와 전담 팀 구성 모두를 충족시켜야 한다. 지표의 측정은 시군구의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성 정도를 점수로 측정하여 시도 내 전체 시군구의 수로 나눈 값이다. 이와 함께 드림스타트 이용 아동에 대한 수혜율을 추가하였다. 이는 사례관리 아동 수를 정책 대상 아동(0~11세 취약계층 아동 수)으로 나눈 값이다.

드림스타트 구축은 전년도에서 측정한 평가지표이나, 수혜율은 2017년 처음 도입된 지표이다. 이는 물리적 환경의 구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제도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또한 드림스타트의 구축이 아동이 많은 지역에서 용이하지만, 아동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에서 별도 조직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군 지역 및 도 지역 담당자의 이의 제기과 전문가 검토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드림스타트라는 물리적 환경의 구성은 여전히 중요하므로 둘 다 측정하고 배점을 구분하였다.

〈표 2-8〉 지표 4-드림스타트 수혜율

	드림스타트 구축			사례관리 아동 수	0~11세 취약계층 아동 수
	전담팀	전담 공무원 (팀장 포함)	전담 민간 인력 (아동통합 사례관리사)		
시도	a	b	c	d	e
A구					
B구					
C구					

2)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은 전년도 평가에서 이견이 많았던 지표로, 매우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sup>13)</sup> 전년도 평가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의

13)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은 지자체와 전문가 간 이견이 큰 지표이다. 중앙부처는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해 평가지표로 이용할 것을 제한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부지의 선정 및 시설의 설치, 민간 시설의 요구, 출산율 저하에 따른 미충족 등의 사유로 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다고 대응하였다. 전문가 및 학부모들은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표로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16년 평가에서는 지표로 포함하되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과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각각 계산하여 단순 평균을 작성하였다(오윤섭 외, 2017, p. 50).

모수가 커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설치를 독려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7년 평가에서는 전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을 합산하여 10점 만점으로 산출하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률 측정에 이용된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공식 통계로, 2017년 기준 자료이다. 그러나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유치원 개황’은 매년 4월에 발표된다. 「영유보육법」에 근거한 ‘보육통계’는 매년 12월 말 기준 자료이다.

〈표 2-9〉 지표 5-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 이용률

	유치원				어린이집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전체
시도	a	b	c	d	e	f	g	h
A구								
B구								
C구								
D구								
E구								

3)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 공공성은 새롭게 추가된 지표이다. 이는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돌봄의 이용을 측정하는 지표로, 지역 내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공적 돌봄의 이용률을 측정하였다. 공적 돌봄에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포함되었으며, 정책 목표인 초등학생 수의 30%를 모수로 측정하였다.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아동 혹은 청소년이다. 즉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 4학년부터 중등 3학년까지의 소년을 포함한다. 올해는 자료의 한계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포함했으나, 차년도부터는 해당 시설을 이용 중인 초등학생으로 제한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시범 운영 당시 시설에 따라 미취학아동을 일부 포함하였는데, 이 사업 도입 이후 초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미취학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나, 올해는 이용 아동 모두를 포함했다.

초등돌봄교실은 2017년 4월 기준이고,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12월 기준이다.

〈표 2-10〉 지표 6-취학아동의 방과후돌봄 이용률

	중앙정부 재정 보조사업				초등학생 수 *30%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시도	a	b	c	d	
A구					
B구					
C구					
D구					
E구					

4) 요보호아동의 자립 지원은 두 개의 하위 지표로 산출된다. 요보호아동의 자립 지원 실적은 전년도와 동일한 지표로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가정위탁보호 종료 혹은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지자체별로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아동과 가정위탁보호 종결 아동에게 1인당 최소 3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아동사업안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실적은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자립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를 추출한 것으로, 대면 평가 시 지자체의 확인을 거쳤다.

〈표 2-11〉 지표 7-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실적

	지원 대상			수혜자 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시도	a	b	c	d	e	f
A구						
B구						
C구						
D구						
E구						



이와 함께 디딤씨앗통장 지원 실적이 신규 추가되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를 뜻하는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면 국가(지자체)에서도 같은 금액(4만 원 이내)을 1:1 정부 매칭 지원으로 아동의 자립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 디딤씨앗통장사업은 내실화를 위해 월평균 1만 원 이상 저축하는 아동의 비율을 지표로 마련하였다. 이는 월별 1만 원 이상 저축하는 아동의 연간 누계 수를 월별 지원 대상 아동의 연간 누계 수로 나눈 값을 1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표 2-12〉 지표 8-디딤씨앗통장 지원 실적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아동 수	월평균 1만 원 이상 저축 아동 수
시도	g	h
A구		
B구		
C구		
D구		
E구		

5) 요보호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은 시설 퇴소나 가정위탁 종결 아동에게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든 지자체에 전세자금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자립 지원과 달리 주거 지원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아동을 분모로 하며, 분자는 공공 주거 지원의 수혜자로 측정하였다. 공공 주거 지원 수혜자 수는 보건복지부의 자립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실적을 기준으로 측정했다. 대면 평가에서 지자체가 확인했다.

〈표 2-13〉 지표 9-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실적

	공공 주거 지원 수혜자	요보호아동 수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수혜율
시도	a	b	
A구			
B구			
C구			
D구			
E구			

올해 신설된 평가지표인 ‘기반 구축’은 전년도 가점 항목인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국가공모사업 신청 및 실적’으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국가공모사업은 예산 편성 등의 한계로 추진하고 있는 국정 과제를 공모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아동정책과 관련된 지자체의 노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면 평가 시 지자체에서 공모 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이 중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표 2-14〉 지표 10-1-국가공모사업 참여 실적

	부처명	신청		선정	
		시도	시군구명	시도	시군구명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의 공간적·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신청 및 조사를 통해 인증하고 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여부와 함께 인증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조례 제정, 예산 편성, 조직 구축 등)을 별도로 측정하였다. 기본 자료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작성하였고, 평가위원은 이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조례 제정은 ‘법률자치검색시스템’에서 확인하였는데, 조례 제정 시기만 적용하였다. 일부 지자체의 개정이 2017년에 이뤄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단, 법규명에 ‘아동친화도시’가 명시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만 인정했다. 예산은 201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서에 ‘아동친화도시’라고 명시된 예산 항목 및 예산 편성 근거를 확인하였다. 전담 조직은 2017년 기준 조직도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하되 과 혹은 계까지 인정하였다.

시도 및 시군구의 차이는 두지 않고 인증 여부 및 지자체 노력의 아동친화도시 요소 개수로만 측정하였다.

〈표 2-15〉 지표 10-2-아동친화도시 구축 실적

① 주체	아동친화도시				⑥ 증빙 자료 1. 있음 2. 없음
	② 평가 인증 (인증 날짜)	③ 조례 제정 (조례명)	④ 예산 편성 (예산 항목, 예산액)	⑤ 전담 조직 (조직도)	
시도명					
시군구명					
1. 복지시	○ (2017. 10. 12.)	× (조례명, 18. 1. 5.)	×	×	1
2-5. 마구	○ (2017. 11. 12.)	○ (조례명, 17. 10. 10.)	○ (항목명, 600만 원)	○ (아동친화 도시팀)	1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지표(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에 활용된 통계 수치는 다음의 자료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획의 적절성 지표와 추진의 적절성 등 정성평가지표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제출 자료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량 지표는 공식적인 통계를 활용하였다. 공식적인 통계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승인 통계와 개별 부처에서 행정 자료를 통해 구축한 행정 통계를 포함한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추출하기도 했다.

〈표 2-16〉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료의 자료원

평가 항목	평가지표	자료
기획의 적절성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아동정책 시행계획 제출 자료
추진의 적절성	수립 절차의 적절성	아동정책 시행계획 제출 자료 * 추가 자료 제출(지자체) 허용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내부 자료(아동복지정책과-아동복지심의회 실적) *추가 자료 제출(지자체) 허용
성과 달성도	드림스타트 수혜율	내부 자료(아동권리과-드림스타트 구축, 사례관리 아동, 아동복지정책과-취약계층 아동) 통계청(1세별 인구, 행복e음(취약계층 아동)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통계청(유치원 개황, 보육통계)
	취학아동 돌봄 공공성	내부 자료(아동권리과-지역아동센터, 인구정책총괄과-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내부 자료(아동복지정책과-자립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 신한은행 실적기준 등
	요보호아동 주거 지원	내부 자료(아동복지정책과-자립 지원 통합관리 시스템) * 실적기준 등
기반 구축	국가공모사업 참여	*추가 자료 제출(지자체)
	아동친화도시 구축	내부 자료(아동권리과-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 추가 자료 제출(지자체) 허용

### 제3절 2017년 시행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 1. 평가 추진체계

이 연구의 평가위원은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명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평가위원의 선정은 아동정책에 포함되는 분야(유아교육 및 보육, 학교교육, 건강 및 보건, 복지, 통계 등)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161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였고, 평가위원 1명당 평균 11개의 과제를 평가하였다.

[그림 2-2] 중앙부처 평가 추진체계



동일한 평가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평가도 수행하였다. 자치단체 평가는 해당 위원의 거주지 혹은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하였다. 이는 전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면 평가 및 컨설팅이 추가되면서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 2. 평가 방법

평가위원들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아동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업 평가의 경험에 차이가 있다. 평가위원 개인별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워크숍을 3회 실시하였다. 1차 워크숍(7월)은 중앙부처 평가를 위한 것으로 사전 점검 자료를 작성한 후 워크숍에서 수정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과 평가 방식에 대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였다. 2차 워크숍(10월)은 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것으로, 3차 워크숍(12월)은 최종 평가 결과 검토 및 차년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것이다.

먼저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는 중앙부처를 위한 평가 지침에 근거하여 정해진 양식을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배정된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를 했다. 그 결과 다수의 사업에서 예산 항목 및 금액의 오기, 성과지표의 미제출 등이 나타났다. 이후 개별 부처의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 검토 결과를 송부하고, 이를 근거로 수정 보완된 자료를 추가 제출받았다. 이후 평가위원은 점수를 포함한 서면 평가를 했다. 중앙부처의 평가 결과는 사전 검토를 했으므로 소명 및 이의 제기 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침의 이해를 위한 워크숍에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해진 양식에 맞춰 서면 평가를 했다. 서면 평가는 주로 제출 자료에 대한 확인 및 미흡 자료에 대한 추가 요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대면 평가를 통해 서면 평가의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최종 점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지표 설정(배점)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무원과 지역사회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했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와 아동 중심의 성과지표 마련을 위해 아동 관련 연구자와 아동정책 시행 추진체계의 현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2회 개최하였다(부록 3 참조).

〈표 2-17〉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자문 및 평가위원 워크숍

구분	일시	장소	목적
평가위원 1차 워크숍	7. 12.(목)	세종시	2017년 중앙정부 평가 지침 설명회
평가위원 2차 워크숍	10. 12.(금)	서울시내	2017년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침 설명회
관계자 자문회의	12. 7.(금)	서울시내	2017년 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전문가 자문회의	12. 7.(금)	서울시내	2017년 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평가위원 3차 워크숍	12. 7.(금)	서울시내	2017년 평가 결과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평가 절차에서 전년도 평가와 가장 큰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면 평가제도 도입이다. 전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추진 실적과 일부 추가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평가를 실시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성이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는 서면 평가를 통해 임의 점수를 부여한 후 회의록 및 실적 결과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수행하기 위해 대면 평가를 도입했다. 대면 평가는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통해 결정된 평가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하였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컨설팅 신청에 근거하여 컨설팅을 하였다. 평가위원의 단순 입력 오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평가 점수가 변경되었으나, 세부 항목의 입력 오류에 따라 총점에서는 변동이 없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컨설팅은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 평가 자료의 개선,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평가도 함께 이뤄졌다. 이는 차년도 평가위원 선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 제 3 장

## 2017년 시행계획 평가 결과

제1절 중앙부처 평가 결과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제1절 중앙부처 평가 결과

### 1. 평가 대상 사업 개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중앙부처 사업은 총 161개이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42.8%), 교육부(24.2%), 여성가족부(11.1%) 순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 연령이 만 6세로,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취학아동에 대한 대부분의 사업은 교육부의 학교 전달체계 내에서 이뤄진다. 이에 반해 미취학아동에 대한 사업과 취학아동이 하교 후 혹은 주말이나 방학 기간 동안 경험하게 되는 지역사회(도서관과 문화센터, 돌봄 시설 등)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사업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연령 기준상 대상이 아동으로 범위가 넓고, 가정 내외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많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가족부는 연령 기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주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 가족 여건이 다양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보다 사업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정책의 주요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정책도 있다. 이 사업들은 부처 고유 사업의 정책 대상에 아동이 포함되고, 아동에 대한 접근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된다. 즉 안전과 환경 관련 사업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아동의 경우 영향이 더욱 크고 장기적일 수 있으므로 기존 정책의 대상으로 아동을 포함하기보다는 아동에게 특화된 정책의 설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를 고려하면서 정책 대상으로서의 아동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아동에게 직접 제공되는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 것이다.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예산은 4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한 수치이다. 이를 부처별로 살펴보면 복지부(1조 4000억 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고용부(1조 3000억 원), 교육부(8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즉 부처별 사업의 개수와 예산의 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복지부가 가장 많은 사업과 예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비가 아닌 교통안전공단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부처 대부분이 예산 대비 90% 이상을 집행하고 있으나, 고용부는 사업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고교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 및 기회 확대(72.3%), 아동 양육기 근무 여건 개선 사업(82.3%) 등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표 3-1〉 2017년 중앙부처 시행계획 부처별 예산 및 집행률

(단위: 백만 원, %)

구분(과제 수)	2017년 예산 <sup>1)</sup>	2017년 집행액 <sup>2)</sup>	집행률
복지부(78) <sup>3)</sup>	1,406,801	1,390,590	98.8
교육부(39)	791,600	790,562	99.9
여가부(18)	272,965	272,536	99.8
식약처(3)	78,068	77,718	99.6
법무부(7)	22,339	21,977	98.4
문체부(10)	123,155	123,155	100.0
고용부(6)	1,311,034	1,087,737	83.0 <sup>4)</sup>
산림청(2)	156,303	161,010	103.0
과기부(1)	4,957	4,957	100.0
국토부(2)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행안부(2)	845	808	95.6
경찰청(2)	682	682	100.0
인권위(1)	사업 제외	사업 제외	사업 제외
산업부(1)	2015년 완료	2015년 완료	2015년 완료
외교부(1)	2015년 완료	2015년 완료	2015년 완료
환경부(3)	19,445	18,703	96.2
계(176)	4,188,194	3,950,434	94.3

주: 1) 2018년 시행계획에 작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하여 일부 사업에서 추경 등으로 인해 실제와 차이가 있음.

2) 사업 대상의 일부만 아동인 경우 등 예산·집행액 산출이 어려운 사업은 제외.

3) 다양한 부처(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통계청 등)가 포함된 사업은 복지부에 포함.

4) 고교 직업교육 현장성 강화(고용부)에서 495억 원 중 358억 원 집행(72.3%), 모성보호 육아 지원(고용부)에서 1조 1000억 원 중 9356억 원 집행(82.3%) 등.

이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실행 기반 조성(1조 5000억 원), 건강한 삶(9000억 원), 함께하는 삶(8000억 원), 미래를 준비하는 삶(7000억 원), 안전한 삶(1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은 아동 양육기 근무여건 개선 정착(모성보호 육아 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에서 1조 1000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어린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향상 사업은 4796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 외 교육복지 내실화,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과후돌봄 체계 정비(교육부, 복지부),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등이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다. 예산 집행률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과 건강한 삶이 98%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실행 기반 조성 사업의 집행률은 85% 수준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사업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실행 기반 조성 사업은 예산 증가에 비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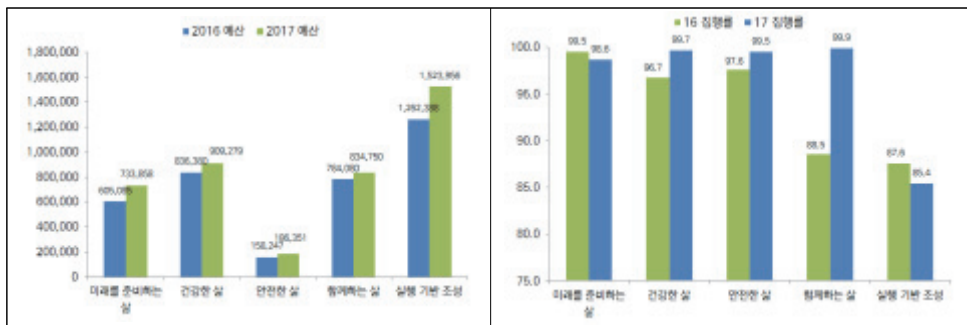
〈표 3-2〉 중앙부처 영역별 예산 규모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 원, %)

5대 영역	2017년 예산	집행액	집행률
1. 미래를 준비하는 삶(교육·문화 등 분야)	733,858	723,815	98.8
2. 건강한 삶(건강 등 분야)	909,279	906,260	99.7
3. 안전한 삶(안전 등 분야)	186,351	185,465	99.5
4. 함께하는 삶(복지 등 분야)	834,750	833,657	99.9
5. 실행 기반 조성(환경·여건 조성 등 분야)	1,523,956	1,301,237	85.4
계	4,188,194	3,950,434	94.3

[그림 3-1] 예산 및 집행률 비교

(단위: 백만 원, %)



## 2. 지표별 평가 결과

2017년 중앙부처 사업을 평가한 결과 기획의 적절성은 20점 만점에 17.4점, 계획의 집행도는 30점 만점에 25.9점, 성과달성도는 50점 만점에 36.1점으로 나타났다. 지표별 점수의 비교를 위해 각 지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기획의 적절성(87.0점), 계획의 집행도(86.3점), 성과달성도(72.2점) 순으로 나타났다. 즉 중앙부처의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기획의 적절성이 가장 높고, 성과 달성도가 가장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세부 지표별로 살펴보면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9.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추진계획 이행도(8.3점),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8.2점) 순이었다.

〈표 3-3〉 중앙부처 지표별 평가 결과

(단위: 점)

항목	2016년 평가지표	지표 평가 결과		항목 평가 결과	
		점수	배점	점수	배점
기획의 적절성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	9.1	10	17.3	20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	8.2	10		
계획의 집행도	예산집행률	17.6	20	25.9	30
	추진계획 이행도	8.3	10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	10	36.1	50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10		
	성과지표의 신뢰성		10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		20		

주: 항목 평가 결과는 지표 평가 결과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합산이므로 단순 합산과 상이할 수 있음.

〈표 3-4〉 중앙부처 지표별 평가 결과

(단위: 점)

항목	2017년 평가 결과			2016년 평가 결과		
	점수	배점	100점 환산	점수	배점	100점 환산
기획의 적절성	17.4	20	87.0	26.9	30	89.7
계획의 집행도	25.9	30	86.3	22.1	30	73.7
성과달성도	36.1	50	72.2	25.4	40	63.5

### 3. 영역별 평가 결과<sup>14)</sup>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5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역시 5대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영역별 평가 결과는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총점은 8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를 평가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의 적절성(18.1점)과 계획의 집행도(26.9점), 성과달성도(39.1점) 모두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건강한 삶’은 77.5점으로 평균에 비해 낮은 총점을 나타냈다. 기획의 적절성(16.6점)과 계획의 집행도(24.9점), 성과달성도(36.0점) 등은 전반적으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다. 이 영역은 전년도 평가 결과의 총점이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낮았다.

‘안전한 삶’ 영역의 평가 결과 총점은 79.7점으로 평균 수준을 나타냈으나, 계획의 집행도(25.6점)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기존 사업 수행에서 아동이 특별하게 고려된다는 점에서 아동정책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고려가 표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함께하는 삶’의 총점은 78.7점으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기획의 적절성(17.9점)과 계획의 집행도(26.2점)에 비해 성과달성도(34.7점)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실행 기반 조성’ 영역 역시 총점 76.4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기획의 적절성(16.3점)과 성과달성도(34.3점)가 다른 영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표 3-5〉 중앙부처 영역별 평가 결과

(단위: 점)

5대 영역	2017년 평가 결과 <sup>주)</sup>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미래를 준비하는 삶	84.1	18.1	26.9	39.1
건강한 삶	77.5	16.6	24.9	36.0
안전한 삶	79.7	17.7	25.6	36.4
함께하는 삶	78.7	<b>17.9</b>	<b>26.2</b>	<b>34.7</b>
실행 기반 조성	76.4	16.3	25.8	34.3
전체	79.4	17.4	25.9	36.1

주: 영역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합산이므로 단순 합산과 상이할 수 있음.

14) 영역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합산이므로 단순 합산과 상이할 수 있음.

다음의 표는 영역별 평가 결과를 세부 과제별로 제시한 것이다. 하위 영역별 평가 결과가 가장 낮은 영역은 아동권리 실행 기반 조성(65.8점)과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68.2점)이다. 두 가지 영역 모두 아동정책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사업이지만, 지방 이양 및 비예산 사업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향후 적극적인 투자가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71.0점), 민간과의 협력 강화(74.0점) 등은 지방이양사업 등의 한계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91.5점)과 아동기 역량 강화(83.2점) 등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로 이뤄지는 학교교육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은 단위 학교라는 명확한 전달체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불용액이 적고 사업의 성과달성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보여 준다.

〈표 3-6〉 중앙부처 영역별 평가 결과

(단위: 점)

5개 영역	결과(점수)	16개 과제	결과(점수)
미래를 준비하는 삶	84.1	아동기 역량 강화	83.2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 실현	91.5
		아동의 참여권 보장	76.8
		놀이여가 권리 보장	81.3
건강한 삶	77.5	생활공간 기반 건강관리 체계 마련	79.9
		발달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내실화	77.1
안전한 삶	79.7	생활 안전	76.6
		사회 안전	82.8
		아동 안전 체계 구축	77.9
함께하는 삶	78.7	아동 보호 무차별 원칙 실현	71.0
		사회적 보호·지원 필요 아동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시행	79.2
기본계획 실행 기반 조성	76.4	아동권리 실행 기반 조성	65.8
		가정의 양육 역량 강화	82.3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81.2
		민간과의 협력 강화	74.0
		아동정책 지원 인프라 강화	68.2
전체 평균	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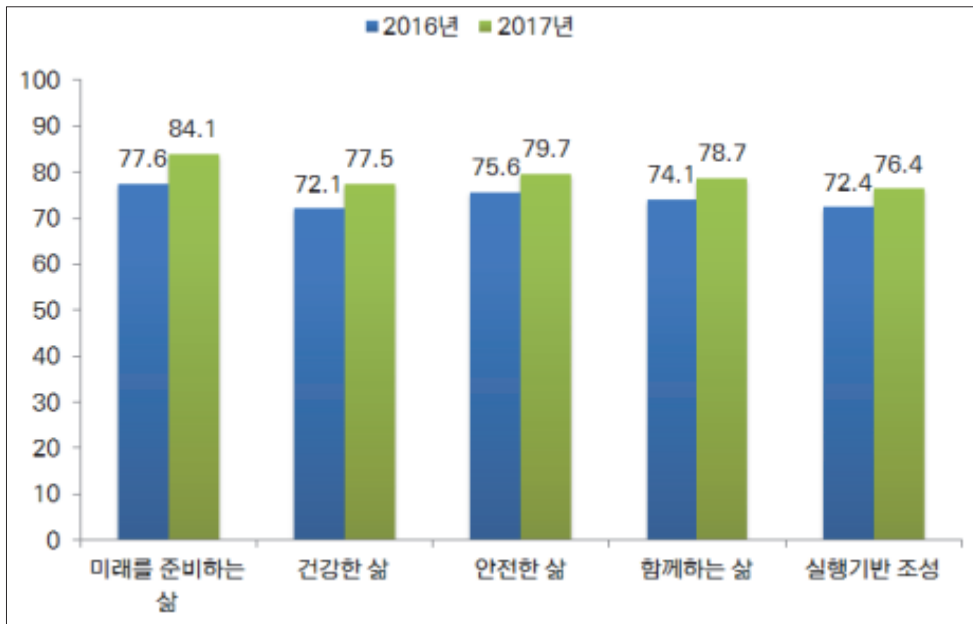
주: 전체 평균은 영역별 평가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평균이므로 단순 평균과 상이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영역별 평가 점수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모든 영역에서 전년도보다 평가 결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전년 대비 8.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건강한 삶(7.5%)도 전년 대비 평가 결과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함께하는 삶은 전년도보다 6.2% 향상되었다.

반면에 실행 기반 조성(5.5%)과 안전한 삶(5.4%)은 전년에 비해 향상되었으나,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영역별 평가 결과 비교

(단위: 점)



#### 4. 유형별 평가 결과

정책 내용의 유형화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8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80.7점,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간접 지원하는 사업이 80.3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79.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상과 공간의 구분이 없는 사업들은 75.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를 평가 항목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기획의 적절성은 모든 유형에서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지원과 보편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계획의 집행도 역시 인프라 구축 사업(그 외)과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아동/가정)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전 부처 및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달성도는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사업들은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으면서 시설 방문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 집행으로 부모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이다. 이 사업들의 성과달성도가 높다는 것은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부모의 선택권은 다양한 정보에 근거하는 만큼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통계의 생산이 필요하다.

〈표 3-7〉 중앙부처 영역별 평가 결과

(단위: 점)

정책 대상	2017년 평가 결과	기획의 적절성	계획의 집행도	성과달성도
아동/기관	80.3	17.3	26.3	36.7
아동/가정	79.4	17.7	25.8	35.9
부모/기관	80.7	18.1	26.9	35.7
부모/가정	87.0	18.2	27.8	41.0
그 외	75.8	17.0	24.5	34.4
전체 평균	79.4	17.4	25.9	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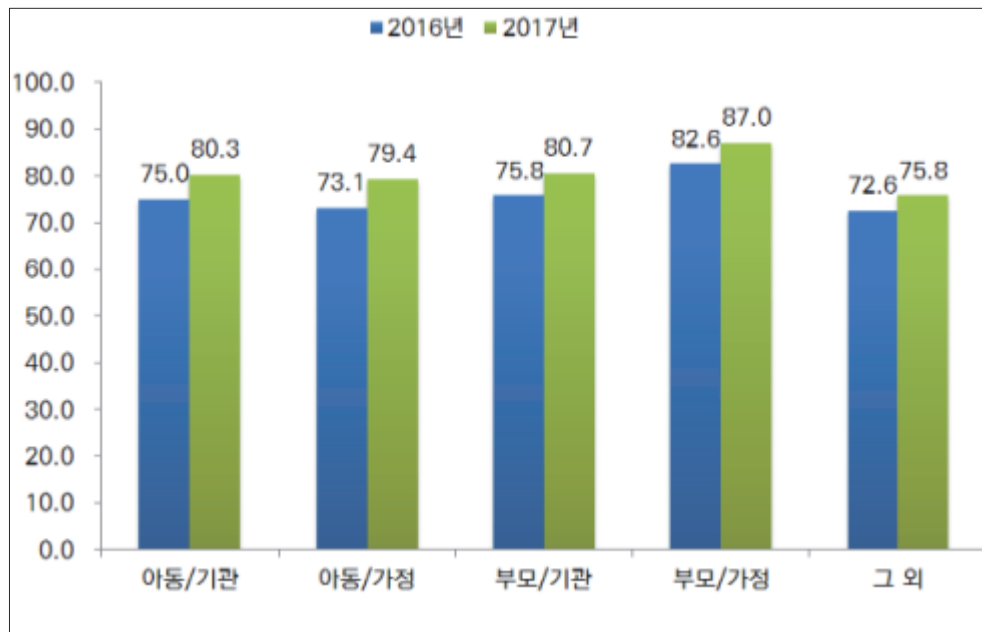
주: 2017년 평가 결과는 영역 평가 결과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합산이므로 단순 합산과 상이할 수 있음.



유형별 평가 결과를 전년도 평가 결과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전년 대비 8.6% 증가해 가장 두드러지고 높게 나타났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부모를 대상으로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이에 비해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의 평가 점수는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그 외 사업은 전년 대비 4.4% 증가해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림 3-3] 유형별 평가 결과 비교

(단위: 점)



##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1. 평가 결과

#### 가. 평가 결과 요약

2017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의 적절성은 10점 만점에 평균 8.9점, 추진 방식의 적절성은 20점 만점에 평균 12.5점, 성과 달성도는 60점 만점에 평균 37.1점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결과 역시 중앙부처의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획의 적절성은 높으나, 추진 방식의 적절성과 성과달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 여건에 적합한 목표 및 전략 수립이 가장 높고(8.9점), 요보호아동의 자립 지원(2개 지표 평균 8.3점), 아동복지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8.1점), 국공립 유아교육·보육서비스 이용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1.5점).

〈표 3-8〉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총괄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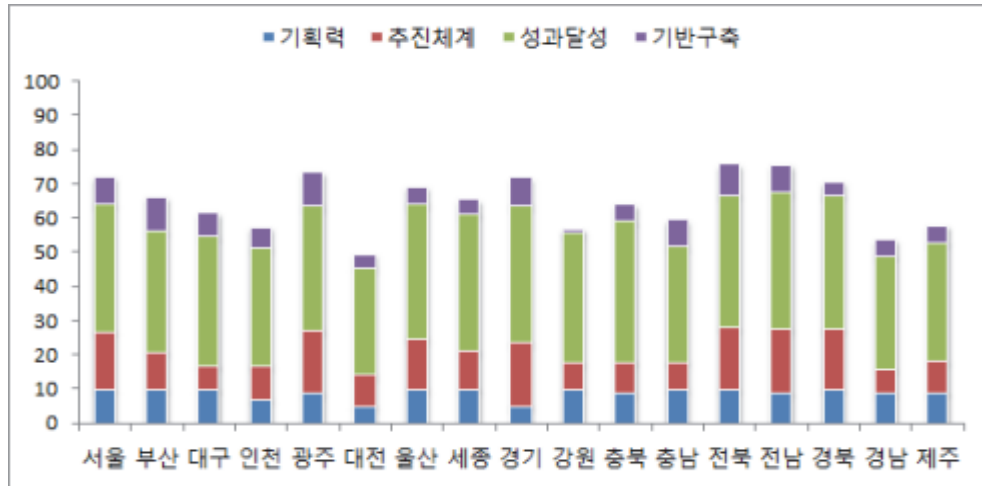
항목	2017년 평가지표	지표 평가 결과		항목 평가 결과	
		점수	배점	점수	배점
기획의 적절성	지역 목표 전략 수립	8.9	10	8.9	10
추진 방식의 적절성	수립 절차의 적절성	4.4	10	12.5	20
	아동복지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	8.1	10		
성과 달성도	아동복지 전달체계	7.6	10	37.1	60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1.5	10		
	취학아동 공적 돌봄 수혜율	5.2	10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16.5	20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6.3	10		
기반 구축	아동친화도시 구축	2.7	5	6.3	10
	국가공모사업 선정	3.5	5		

주: 항목 평가 결과는 지표 평가 결과의 소수점 아래 둘째 이상 자리 수치를 포함한 합산이므로 단순 합산과 상이할 수 있음.

이를 그림으로 도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시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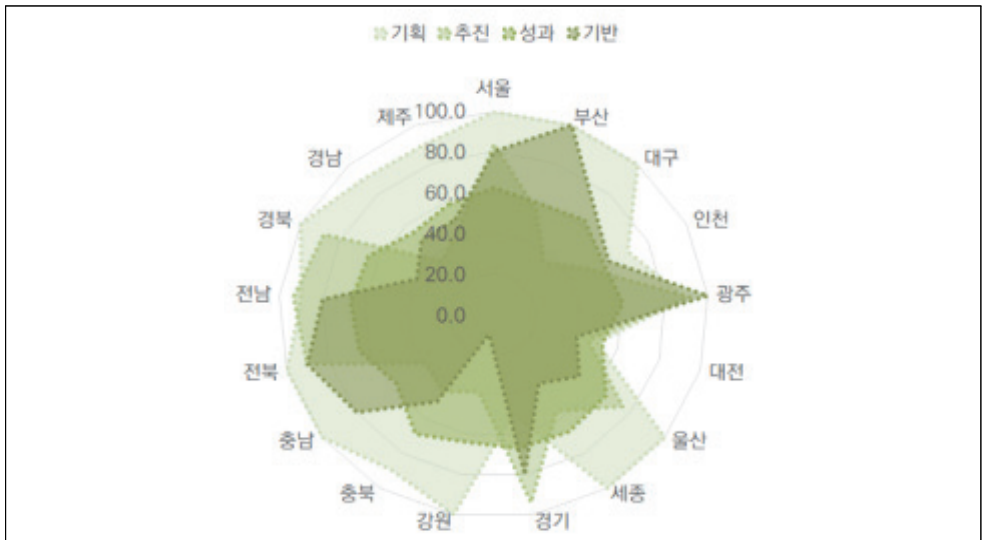
(단위: 점)



한편 지표별 평가 점수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네 개의 평가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높은 점수는 기획의 적절성으로, 평균 89.4점이다. 대부분의 시도에서 100점 만점을 나타내고 있으나, 인천, 대전, 경기 등의 지역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 외 추진 방식의 적절성과 성과달성도, 기반 구축의 점수들은 평균 60점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3-13).

총점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과 전남이고, 그 뒤를 이어 광주, 서울, 경북, 울산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이다. 평가 항목별로 비교하면 추진 방식의 적절성은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큰 데 반해 성과달성도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반 구축은 부산, 전북, 광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표별 분포를 보면 지표 1(지역목표 전략 수립)은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고 있는 데 반해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와 지표 5(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률)는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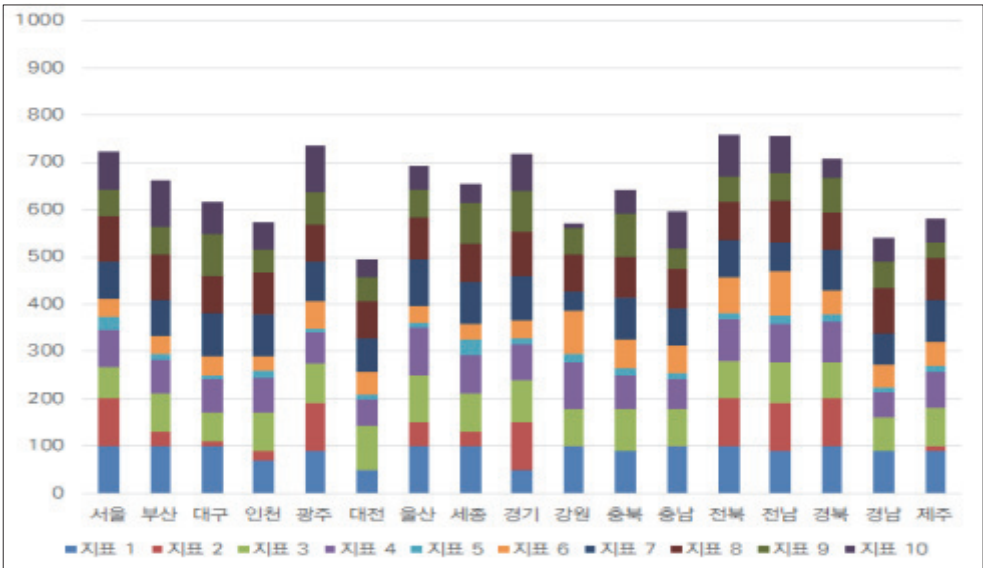
[그림 3-5] 지방자치단체 평가 항목별 분포: 시도 기준



주: 지표별 비교를 위해 각 지표의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분포를 비교한 것임.

[그림 3-6]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별 분포: 시도 기준

(단위: 점)



주: 지표 1.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  
지표 3.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지표 5.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률  
지표 7.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자립지원금)  
지표 9.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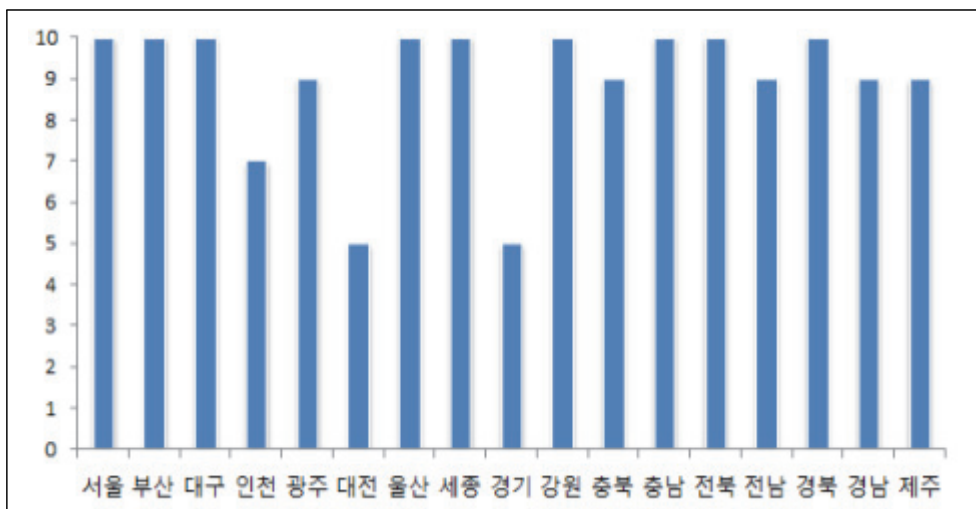
지표 2. 수립 절차의 적절성  
지표 4. 드림스타트 수혜율  
지표 6.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  
지표 8.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디딤씨앗통장)  
지표 10. 기반 구축(아동친화도시, 국가공모사업)

## 나. 평가 항목별 분포

평가지표별로 시도별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획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8.9/10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편차는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역 여건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경기, 인천은 지역별 목표와 추진 방향, 지역 여건에 대한 분석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충북은 지역 여건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었으나, 추진 방향과의 연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7] '기획의 적절성'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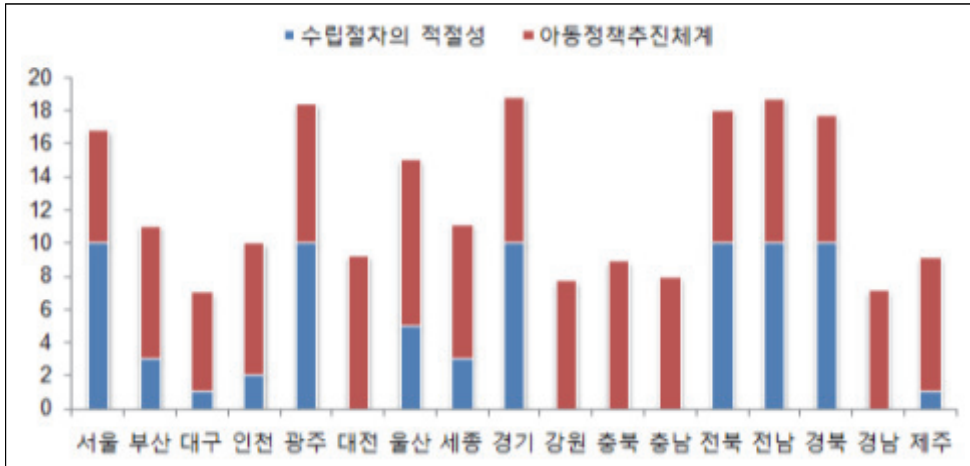
(단위: 점)



추진 방식의 적절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나(평균 12.5/20점), 전년 대비 점수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수립 절차의 적절성 지표는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정책 추진체계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정책 추진체계를 측정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3-8] '추진 방식의 적절성'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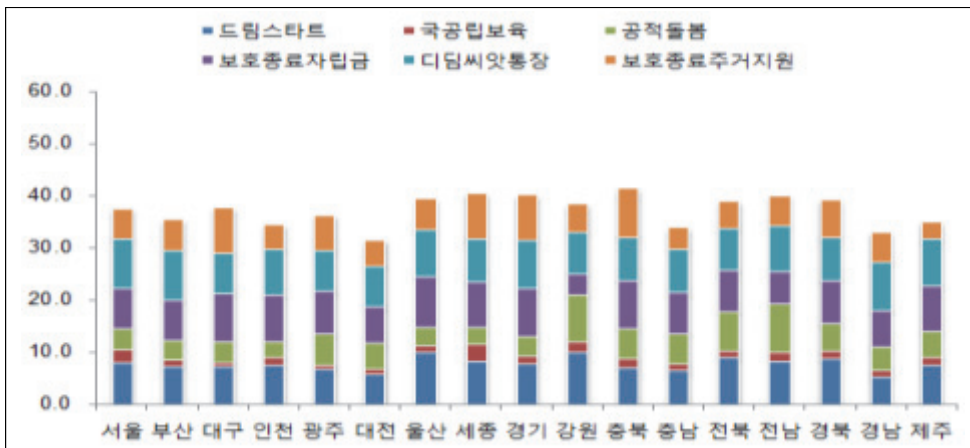
(단위: 점)



성과달성도는 다른 평가 항목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7.1/60점). 전반적으로 드림스타트와 요보호아동에 대한 디딤씨앗통장,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등은 지역 간 큰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률, 공적 돌봄은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성과달성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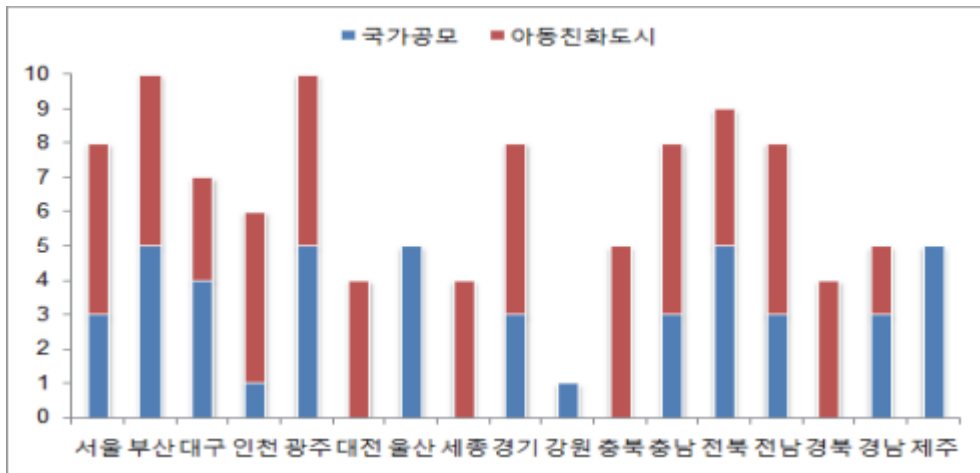
(단위: 점)



올해 신설된 지표인 ‘기반 구축’은 전년도 가점 항목인 아동친화도시와 국가공모사업 참여로 구성된다.

[그림 3-10] ‘기반 구축’ 평가 결과

(단위: 점)



#### 다. 평가지표별 분포

평가 항목별 분포에서 평가 항목에 평가지표가 단일한 지표 1을 제시했으므로 추진 방식의 적절성 항목부터 지표별로 제시하였다.

‘지표 2-수립 절차의 적절성’은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큰 지표이다. 서울과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경북은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 및 시군구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시설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과거 시설 관계자 중심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의견 수렴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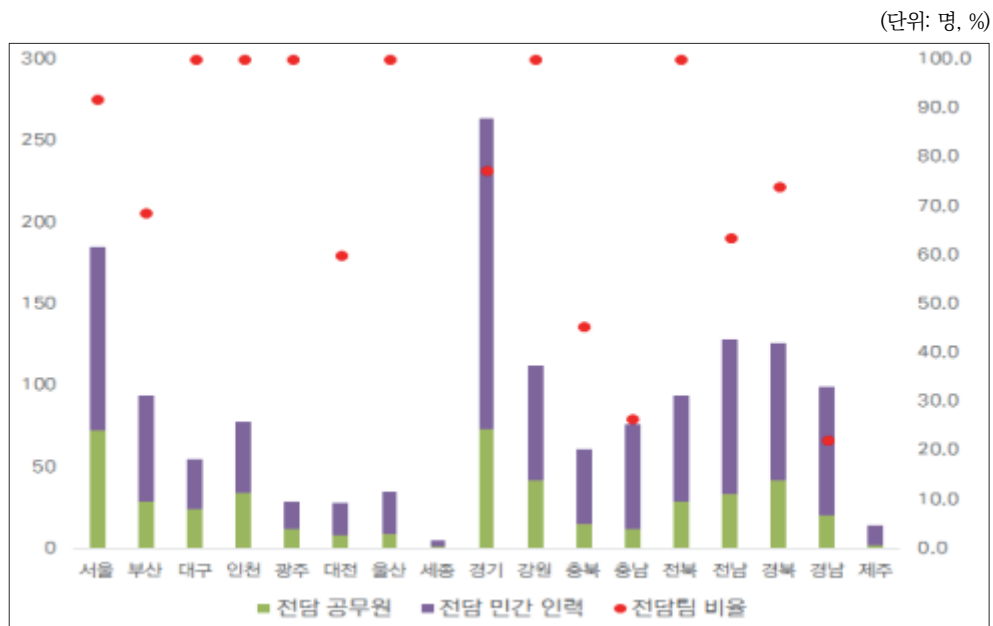
‘지표 3-아동정책 추진체계’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적을 평가한다. 모든 시도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고, 1회 이상 운영했으나 다수의 경우 서면으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대부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점수(6.1점)를

부여했다.

성과달성도의 경우 평가지표는 5개이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두 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로 측정한 지표는 6개(지표 4~지표 9)이다.

‘지표 4-드림스타트 구축’의 경우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설치가 완료되었으나, 전담팀 설치 여부에는 차이가 있다. 그 결과 경기와 서울, 전남, 전북, 강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구 및 자치시가 없어 평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1] 드림스타트 전담팀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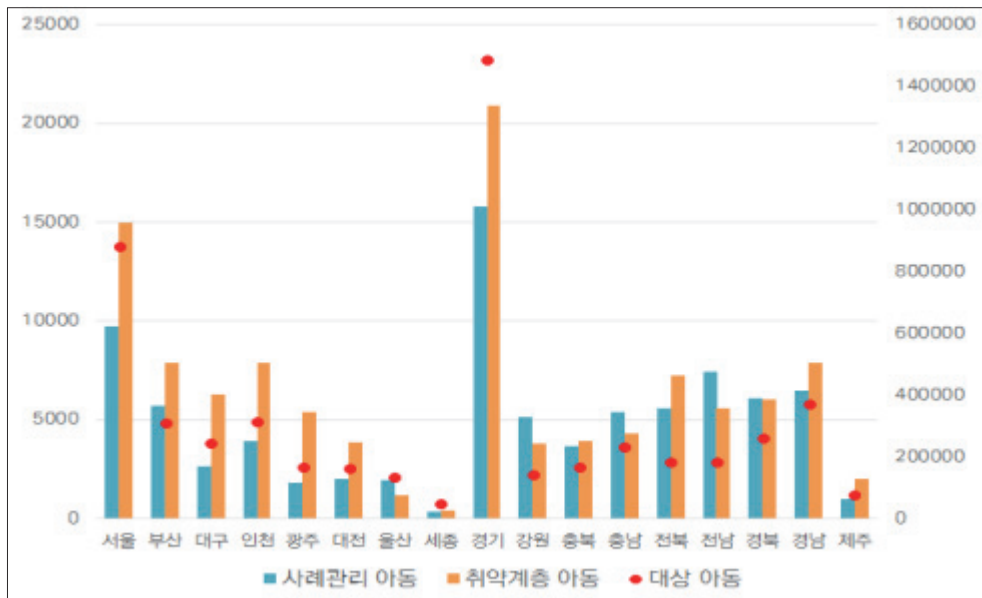
한편 전년도에 지적된 바와 같이<sup>15)</sup> 아동 수에 따른 전담팀 구축의 한계를 고려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수혜 아동의 비율을 측정한 결과 울산, 강원, 충남에서 사례관리 대상 아동이 행복e음에 등록된 저소득층 아동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경북은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취약계층 아동의 수가 일치했으며,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수가 취약계층 아동의 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5) 시도 내 시군의 특성(아동 수)에 따라 전담팀 구축의 평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림 3-1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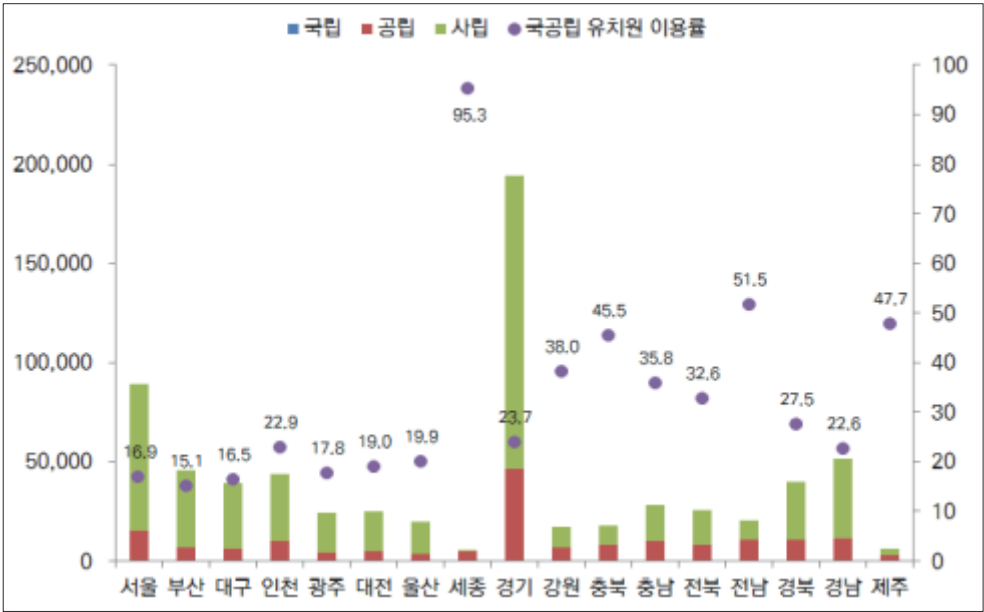


‘지표 5-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은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과 어린이집 이용률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공무원과 국책 연구기관의 이전으로 30, 40대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도시 설계 당시 국공립 유치원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계획도시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영향으로 2017년 기준 세종시의 유치원 이용 아동은 5370명이다. 이 중 공립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5117명으로 국공립 이용률이 95.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특별광역시는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이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광역도는 국공립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특히 전남과 충북, 제주에서 국공립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경기와 경남, 경북에서 국공립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립 유치원은 강원과 충북, 충남에서만 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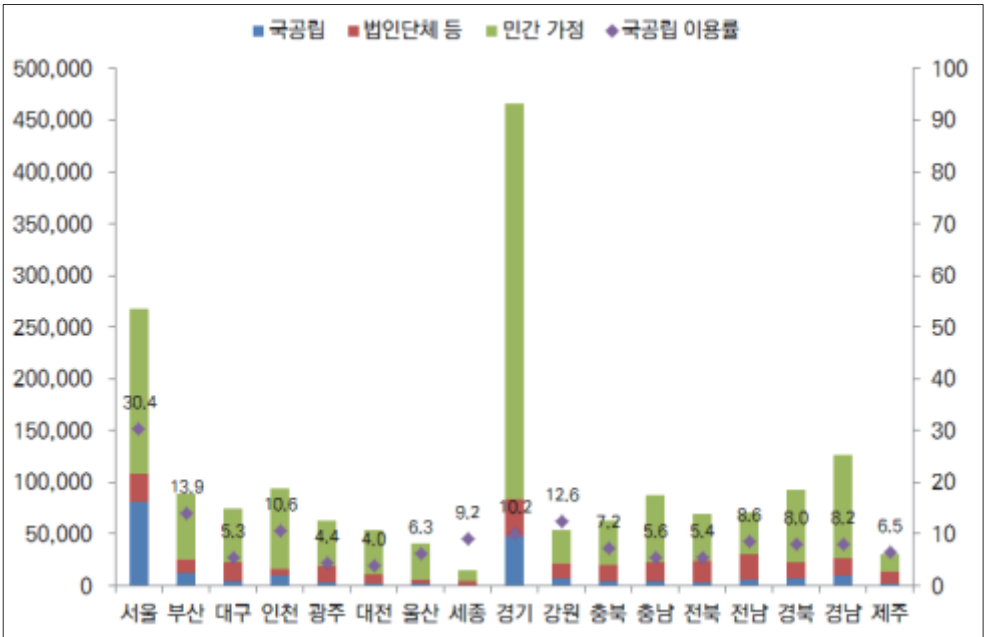
[그림 3-13]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단위: %)



[그림 3-14]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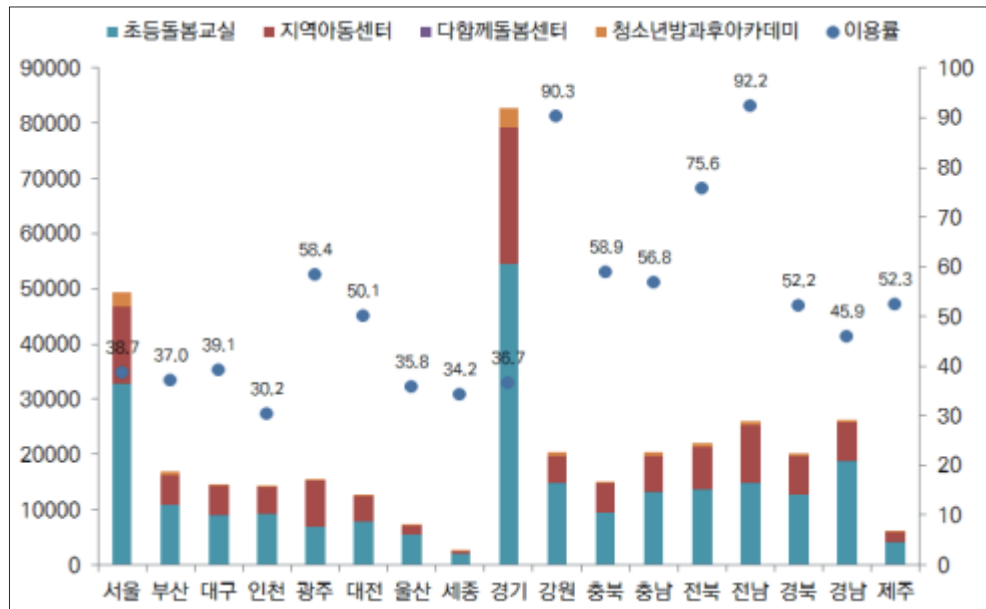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서울이 30.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부산(13.9%), 강원(12.6%), 인천(10.6%), 경기(10.2%)만 10%를 초과했다.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는 경우 제주도와 전남이 서울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단체의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평가에서는 반영하지 않았다.

주의할 것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수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국공립 이용률을 각각 계산하여 평균값을 측정하는 것은 지역별 격차를 비교할 때 한계가 있다. 전년도에는 지표값이 너무 적어 각각의 국공립 이용률을 계산한 후 단순 합산하여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올해 평가에서는 보정하였다.

‘지표 6-취학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이용률’은 시도별로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92.2%)과 강원(90.3%)에서 가장 높았다. 강원과 전남 지역은 초등학생 아동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초등돌봄교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3-15] 취학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이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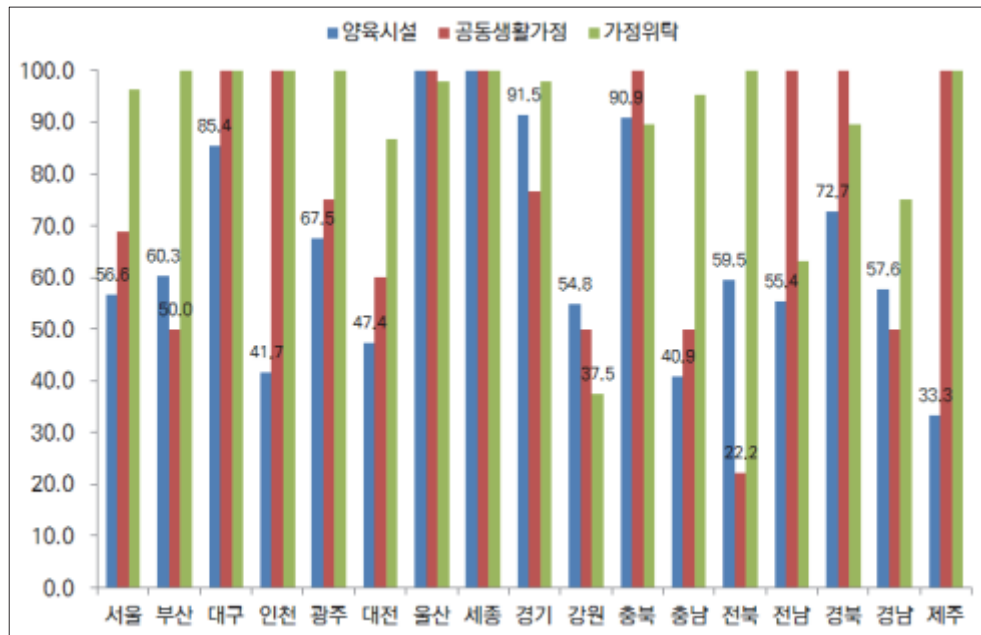


‘지표 7-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실적’은 지원 대상에 대한 수혜율로 측정하였다. 전년도에는 시도별 지원금 기준액으로 측정했으나, 대부분의 시도가 중앙정부의 권고(300만 원)를 일정 수준 이상 수용하고 있어 지표의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 평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실적으로 지표의 측정 방식을 전환하였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 지원)에 근거하여 보호 대상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공동생활가정 아동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는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육시설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 수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는데, 양육시설 아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림 3-16]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실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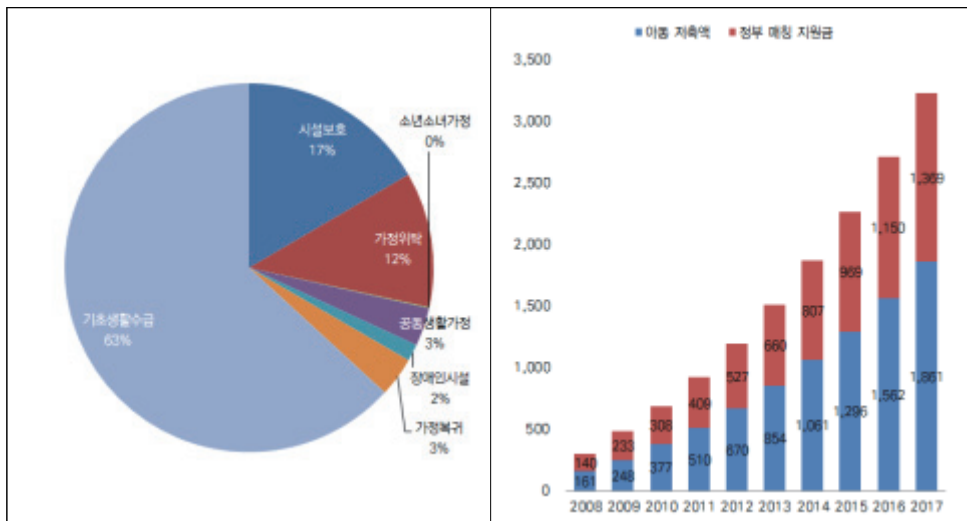


주: 양육시설(울산) 공동생활가정(울산, 세종, 경북, 제주), 가정위탁(세종)은 대상자가 없어 수혜 실적을 100점으로 표기.

‘지표 8-디딤씨앗통장’의 대상 아동은 보호종료아동의 대상과는 상이하다.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을 보호 유형별로 구분하면 기초생활수급(63%), 시설보호(17%), 가정위탁(12%), 공동생활가정(3%), 가정복귀(3%), 장애인시설(2%), 소년소녀가정(0%)이다. 디딤씨앗통장의 저축액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총저축액은 3230억 원이며, 이 중 정부 지원은 1369억 원이다.

[그림 3-17] 디딤씨앗통장 대상 아동과 매칭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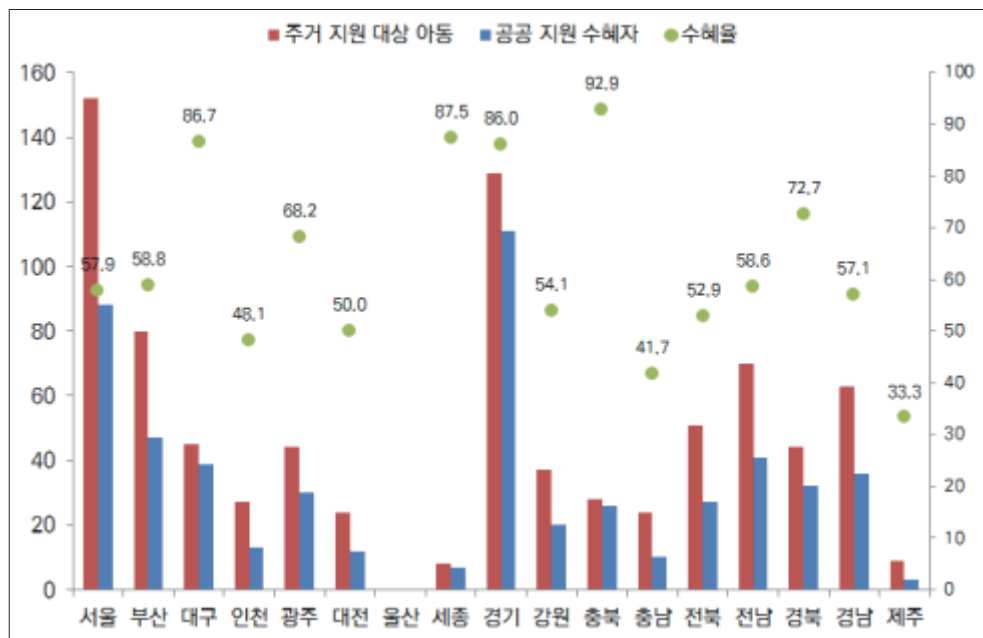
‘지표 9-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주거 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게는 영구임대주택, 전세주택, 자립생활관, 공동생활가정 등의 정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지원 외에도 전세, 월세, 자가, 고시원(자취), 기숙사 등 주택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친인척 및 친구 집에서 기거하거나 가정으로 귀가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은 정부 지원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는 연령 초과로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공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아동들은 선후배 혹은 친구들과 함께 살거나 대학교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것을 선택한다. 만약 주거 지원을 선택하지 않는 아동을 제외한다고 해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주

거 기준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자립 지원과 함께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충남, 인천, 제주에서 공적 주거 지원 실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도서 지역의 특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높고 영구임대주택이 적은 특징이 있다.

[그림 3-18]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단위: %)



주: 울산은 대상 아동과 실적이 모두 없어 제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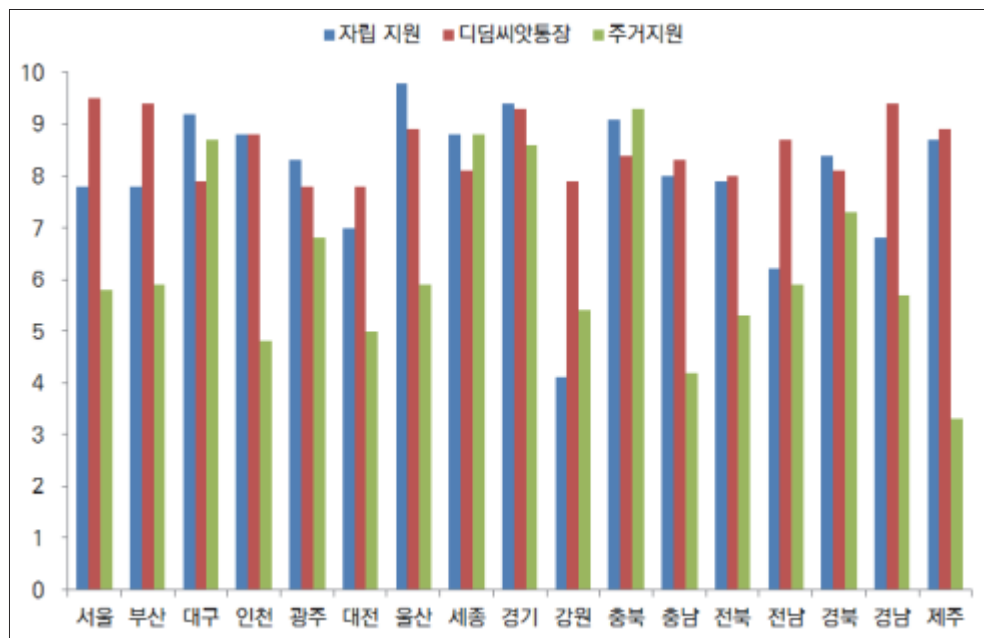
지표 7~지표 9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세 개의 지표를 비교하면 자립 지원과 디딤씨앗통장이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데 반해 주거 지원은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큰 편이다.

먼저 '지표 7-자립 지원'은 전국 평균 8.0점인데, 강원(4.1점), 전남(6.2점), 경남(6.8점)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울산(9.8점), 경기(9.4점), 대구(9.2점)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지표 8-디딤씨앗통장 지원율'은 전국 평균 8.5점으로 자립 지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9.5점)과 부산(9.4점), 경남(9.4점)이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광주(7.8점)와 대전(7.8점)은 낮은 점수를 나타냈

으나,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지표 9-주거 지원’은 평균 6.3점으로 다른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충북(9.3점), 세종(8.8점), 경기(8.6점)가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3.3점), 충남(4.2점), 인천(4.8점)에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9] 지방이양사업 비교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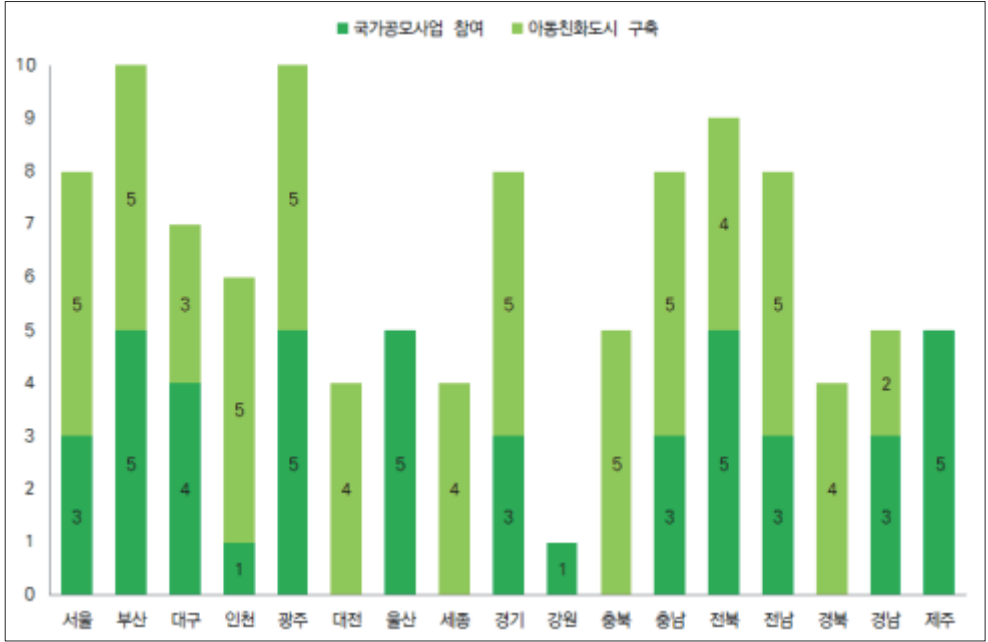


지표 10은 국가공모사업 참여(5점 만점)와 아동친화도시 구축(5점)으로 구성된다. 국가공모사업은 신청(1점) 및 선정(2점)은 부산, 광주, 울산, 전북에서 5점 만점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다함께돌봄사업의 신청, 아동전문보건의료 및 아이러브맘 원스톱센터 운영으로, 광주는 다문화 아동 및 가정을 위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맘쓰리센터 설치, 병원아동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울산은 다함께돌봄사업과 세대 공감 창고 놀이터 운영으로, 전북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저출산극복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서비스사업,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등 주로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과 특수한 욕구를 가진 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였다. 대전과 세종, 충북, 경북은 국가공모사업 참여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은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남에서 5점 만점을 나타냈다. 울산과 강원, 제주는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림 3-20] 국가공모사업 참여와 아동친화도시 구축 실적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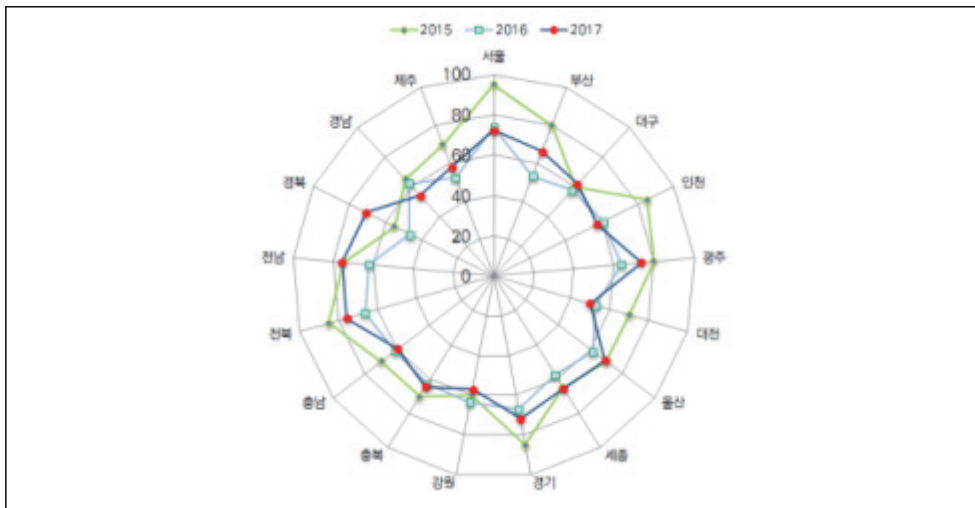
## 라. 전년도 평가 결과 비교<sup>16)</sup>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결과를 전년도와 비교해 살펴본 결과 2015년의 평균 점수가 72.9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별시 및 광역시의 점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획의 적정성’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2016년과 2017년에는 정량 지표의 비중이 강화되었는데, 평균 점수가 각각 60.3점과 64.9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관리의 엄격한 적용과 아동 인구의 고려에 따른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기획의 정성지표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총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경향이 인천, 광주, 대전 등 특별·광역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3개년 모두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은 유일하게 연도별 총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지역이다. 반면에 경기도는 아동 수를 고려한 지표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총점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총점을 단순히 비교한 것으로, 평가지표 배분의 변화와 지표 측정의 엄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3-21] 전년도 평가 결과 비교

(단위: 점)



16) 2015년 평가에서는 가점을 적용한 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활용하고, 2016년 평가에서는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활용하였으나, 2017년 평가에서는 평가지표에 가점을 제외하여 가점을 제외한 이전 년도 평가 원점수와 비교하였으므로 각년도 최종 평가점수와는 다를 수 있다.

## 마. 현안 점검

현안 점검은 주요 현황이나 사회적 문제 등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 평가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현안을 점검하였고, 2016년에는 방과후 아동 돌봄 체계(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돌봄교실 등)를 점검하였다. 이 결과는 지표 생산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위한 취약아동에 대한 돌봄 수요·공급을 파악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2017년 현안 점검은 아동정책을 수행하는 조직 체계에 대해 측정하였다. 현안 점검 기준은 지역 단위 아동 여건과 아동정책의 공급, 아동정책의 수요 측정이었다. 이때 지역 단위 여건에서는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도 및 아동 관련 부서 업무 현황을 파악하였고, 아동수당 담당자 지정 여부를 측정하였다.

아동정책 공급에서는 아동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수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의한 확충 전담 인력 수를 측정하였다. 이는 아동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재정 투입의 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아동정책의 수요에서는 지역별 아동의 수와 취약계층 아동 수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 정책이 다양한 부처에서 수행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주로 여성가족실 혹은 여성가족국에 소속되어 있었다. 전담 부서는 평균 2개과로 나타났다. 아동정책 부서는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科) 내 아동친화팀 및 방과후돌봄팀, 보육팀, 아이돌봄팀 등이 계(係)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에 관한 문제가 매우 심각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이 중복 혹은 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아동정책 업무는 제한되고, 출생 관련 업무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경우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오히려 감소하게 되면서 아동정책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의 우려가 공식적인 자문회의에서도 제시되었다. 다만, 서울특별시 본청의 아동 업무는 상대적으로 축소된 데 반해 자치구의 아동정책은 오히려 적극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예를 들어 노원구는 자치구의

노력으로 아동복지관을 건립하고 도서관과 아동 청소년 문화공간,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파트 1층 공간을 장기 유상 임대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단기간 내 확충하고 있다.

## 2. 지방자치단체 평가 총평

### 가. 서울

서울특별시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적절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지역 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에 근거하여 아동정책 추진 방향과 시행계획의 중점 사업을 결정하였다. 아동정책의 수립 절차와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운영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진척이 상당히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서울특별시는 아동 수가 많은 특징으로 인해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과 취학아동의 공적 돌봄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아동 인구가 많고, 취약계층 아동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므로 보육교육의 취약성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과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25개 자치구 내의 특성이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도 특징이다. 공적 보육 및 교육의 공급률과 다문화 아동의 분포 등에서 지역 내 격차가 두드러진다. 이에 대한 투입에서 지역 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부산

부산광역시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전략 목표의 수립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정책 추진체계 및 드림스타트 구축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동 수에 대한 보정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의견 수렴 실적이 미흡하고,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공공성의 개선 여지가 상당하다.

전년도와 2017년 평가 자료 모두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한 단년도 시행계획의 방향 설정 등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나, 지역의 특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자원 간 연계와 아동이 포함되는 사업의 설계 등을 통해 아동정책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다. 대구

대구광역시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에서 지역 여건의 분석,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목표 및 방향 설정 등 구체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정책 추진체계 및 드림스타트 구축,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실적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절차의 의견 수렴 실적과 미취학 및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의 공공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광역시의 아동 인구 비중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광역시의 정책 노력 의지가 있다면 단기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라. 인천

인천광역시는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및 드림스타트 수혜율,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아동정책 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의 분석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 내 아동의 현황과 특수한 욕구,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등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계획을 작성하였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이 미흡하고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는 특별·광역시 중에서 도서 지역의 비중이 높고, 연륙도가 없는 섬이 존재하는 등 물리적 환경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은 완전하게 공공 부문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인천광역시의 아동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병설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마. 광주

광주광역시시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역 여건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하였다. 성과달성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단기간의 노력이 두드러진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아동친화도시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거쳐야 하는 의견 수렴 실적이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교육과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공공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바. 대전

대전광역시시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인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돌봄 이용률 역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방향성과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역 여건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지 않았고,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와 함께 미취학아동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전광역시시는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작성 및 추진 실적 평가를 위한 자료 작성이 충실하지 않았다. 향후 아동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공공 부문의 책무성을 기대할 필요가 있다.

## 사. 울산

울산광역시시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전략 목표의 수립과 특색사업의 선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공공성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아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드림스타트 구축 등의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울산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비해 추진 실적의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투입 중심의 사업 관리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이 없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표가 높게 평가되었으나, 실질적인 정책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전략 목표 수립이 적절하게 이뤄졌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이주로 혁신도시를 조성했기 때문에 세종시는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이양사업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실적과 주거 지원 실적도 매우 높았다.

반면에 세종시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 및 학부모 참여 의견 수렴이 미흡하고,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참여가 소극적이다.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재정 운용의 여지가 있어 보편적인 아동·청소년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을 수 있다.

## 자. 경기

경기도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이 우수하나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아동 및 학부모를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한계를 갖고 있다. 도내 다양한 시군구 유형이 있음에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 것은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사하게 예산의 투입 및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성, 요보호아동의 자립 지원 등에서 아동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경기도의 정책 노력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 및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년에 비해 성과달성도 중 주거 지원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미취학아동에 대한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률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올해 시군구 단위까지 평가 자료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경기도 내에서 오산시의 실적이 돋보인다.

## 차. 강원

강원도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적절성이 양호하나, 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의견 수렴의 절차는 미흡하다. 특히 전년도에 의견 수렴 실적이 높았던 것에 비해 올해 평가의 점수가 낮은 것은 실적의 미제출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역 여건에 대한 분석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드림스타트의 구축과 방과후돌봄 이용률 실적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사하게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시설 이용률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과 주거 지원 실적, 국가공모사업의 참여 및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정부 노력을 추가 투입할 여지가 있다.

올해 강원도의 시군구별 정량지표를 분석한 결과 화천군의 실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카. 충북

충청북도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적절성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전략 목표의 수립이다. 전년도의 특색사업 선정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던 충청북도는 실적 제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의견 수렴 실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미취학아동에 대한 국공립 시설 이용률과 취학아동에 대한 공적 돌봄 이용률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모사업 참여에 보다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는 전반적으로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평가 관련 프로세스에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향후 시행계획 평가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 타. 충남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행복출발아동프로젝트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하여 아동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이 계획에 근거하여 아동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거쳐야 할 아동 및 학부모에 대한 의견 수렴 실적과 미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공공성 등의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실적도 미흡하다.

또한 충남 지역은 다른 시도에 비해 군 단위 지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역들에서 아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했음에도 군 지역을 포함하는 다른 도 지역에 비해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역 여건의 특성상 아동정책이 정책의 우선순위에 서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파. 전북

전라북도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이뤄진 세 차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 매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지역 여건에 대한 분석이 우수하고,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 및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운영 등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드림스타트 구축,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실적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실적 및 주거 지원 실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시행계획의 작성, 추진 실적, 예산 자료의 제출 등 평가 관련 프로세스를 충실하게 따랐다. 추가 자료 제출 및 의견 수렴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충실하게 제출함으로써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전라북도는 상대적으로 시도 내 시군구 간 격차가 적은 편으로 전라북도의 추진에 따라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성과가 단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 하. 전남

전라남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가장 단시간 내 개선 실적을 보여 준 지방자치단체이다.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 여건을 분석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전략을 적절히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수립 절차의 적절성 및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드림스타트 구축 등 투입 지표가 매우 우수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취



학아동의 방과후돌봄 및 아동친화도시 구축 등에서도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전라남도도는 도서 지역이 많고 아동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이다. 이 평가에서 아동 수를 고려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향상된 측면도 있는데, 신규 지표인 방과후돌봄에서 좋은 실적을 낸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자체가 꾸준히 관리해 온 결과이다.

반면에 미취학아동에 대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 이용률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나 주거 지원 실적에 대한 노력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거. 경북

경상북도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여건의 분석과 이에 근거한 정책 추진 방향의 설정이 적절하다.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추진체계, 드림스타트 구축이 적절했으며,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 및 주거 지원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의 공공성과 국가공모사업의 참여이다.

또한 경상북도는 고령화 비율이 높고, 산간 지역은 아동 수가 적고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올해 평가에서는 아동 수를 보정하는 지표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점수는 전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군구별 평가에서는 영주시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나. 경남

경상남도는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의 적절성은 적절하지만, 성과달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과 주거 지원 실적은 양호한 반면, 드림스타트 수혜율, 미취학아동 및 취학아동에 대한 돌봄 공공성, 국가공모사업 참여 및 아동친화도시 준비 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경상남도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하였다. 그 성과가 2017년에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전년도에 의견

수립을 위한 적극적인 방법을 컨설팅을 통해 제안했는데, 올해 평가에서 의견 수립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더. 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기획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시행계획 수립 시 의견 수립 절차는 다소 미흡하였다.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구축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를 갖고 있는데, 행정시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 등에서 구속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시가 있거나 행정시도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아동정책의 기반 구축과 관련한 점수에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7년에는 실제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였다.

한편 제주도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실적은 우수하나, 주거 지원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성상 주거 지원의 형태가 타 시도와 유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향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4 장

## 사례 연구

제1절 아동정책 및 성과의 국제 비교

제2절 주요 체제전환국의 아동정책 현황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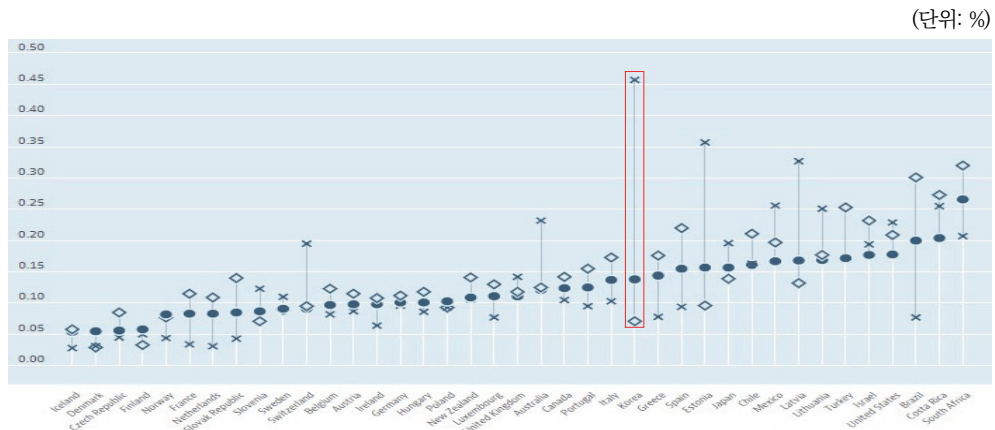
# 4

## 사례 연구 <<

한국은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율로 악명이 높다. 하지만 아동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그림 4-1). 이러한 역설은 2018년 3·4분기 합계출산율이 0.95명으로 1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이 깊다.<sup>17)</sup>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가 있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의 출산율과 함께 아동 빈곤율이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정은희, 백승호, 김성아, 2018).

이 장에서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아동정책 현황과 성과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성공적인 아동 및 가족정책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주요 국가의 사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경제·사회·인구학적 맥락에 적합한 아동정책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4-1] 주요 국가의 노인 및 아동 빈곤율



주 1) 동그라미(●)는 전체 빈곤율, 엑스(×)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다이아몬드(◇)는 0~17세 아동 빈곤율임.  
 2) 중위 가구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으로 가정한 상대 빈곤율임.  
 3) 국가별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따라 2013~2017년 중 최근 연도의 수치이고, 한국은 2015년 수치임.  
 자료: OECD. (2018).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 (<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에서 2018. 12. 10. 인출)

17) 통계청 보도자료. (2018. 11. 28.). 2018년 9월 인구동향. 대전: 통계청.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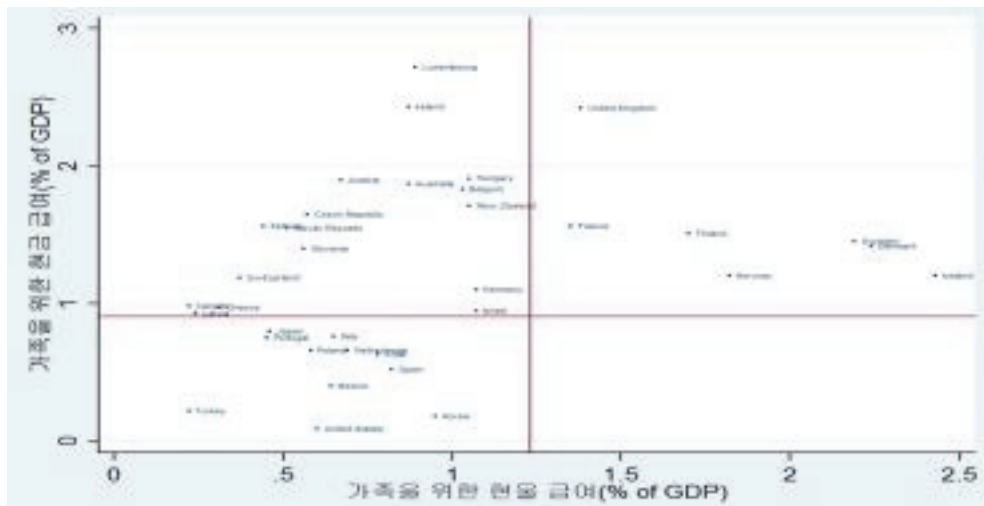
## 제1절 아동정책 및 성과의 국제 비교

### 1. 주요 국가의 아동정책 현황

#### 가. 정부지출 구조

국가의 정책 노력과 수준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는 정부지출의 구조이다(Rosen & Gayer, 2010). 여기에서는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정부지출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국은 OECD 주요 국가 대비 가족을 위한 정부지출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현금 급여의 비중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상대적으로 2013년 전 계층으로 확대된 보육료 지원이 포함되었을 때, 현물 급여의 수준이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다만, 2018년 9월에 도입되고, 2019년에 확대되는 것으로 발표된 아동수당이 현금 급여에 포함되면 가족을 위한 정부지출의 현금 급여의 수준이 현행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4-2] 주요 국가의 가족 지출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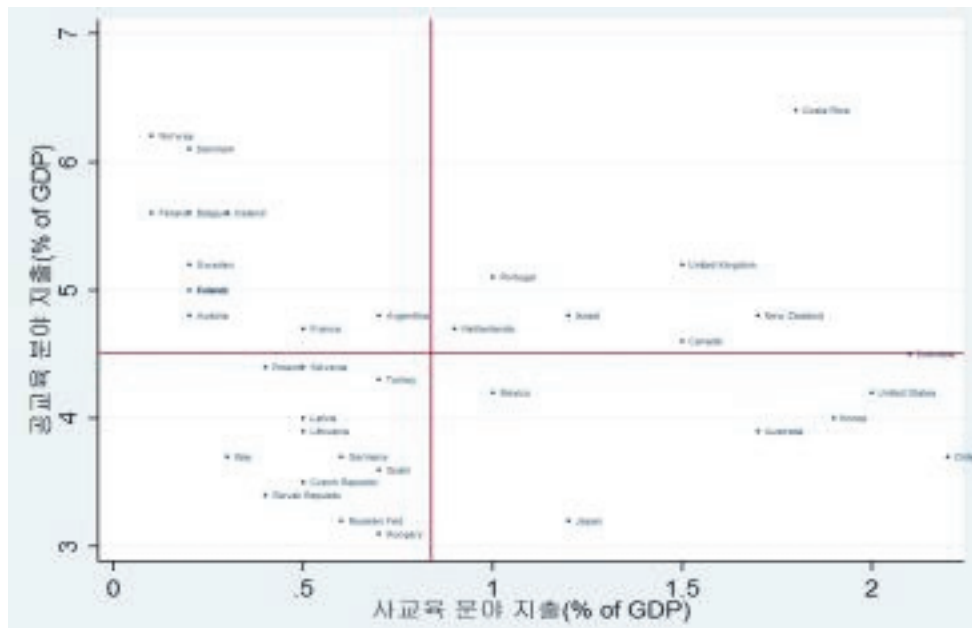
주: 1)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3년 기준값을 활용함.

2) X축 및 Y축의 실선은 각각 현금 급여와 현금 급여의 평균값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8. 12. 10. 인출)

다음은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서 교육 분야의 지출 수준이다. 한국의 공교육 분야 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사교육 분야 지출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지출 구조에서 나타나는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낮은 공교육 체계는 향후 교육 정책에서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교육비 부담 완화(29.8%)’, ‘국공립 교육기관 강화(23.9%)’, ‘무상교육 확대(22.8%)’를 선택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과 부합하는 것이다(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우선희, 김성아. 2018. pp. 142-143.).

[그림 4-3] 주요 국가의 공교육 및 사교육 분야 지출 구조



주: 1) 비교 가능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2013년 기준값을 활용함.

2) X축 및 Y축의 실선은 각각 사교육 분야와 공교육 분야 지출의 평균값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8. 12. 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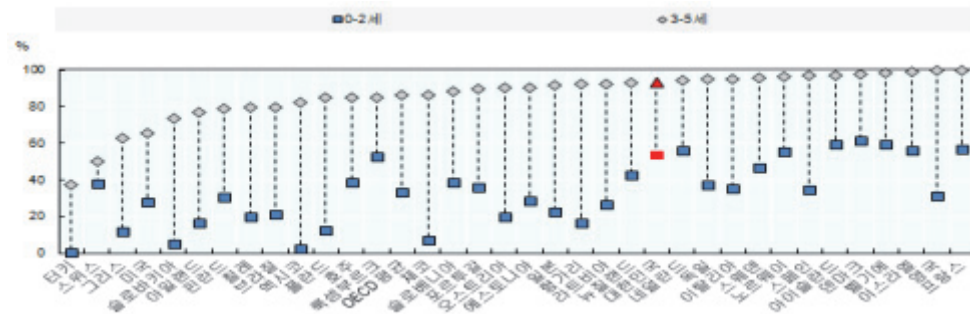
## 나. 서비스 구조

다음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현황이다. 아동에 대한 주요 서비스로 보육서비스를 보면 0~2세 아동의 보육 이용률은 53.4%로 OECD 평균 33.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3~5세 아동의 이용률 또한 93.4%로 OECD 평균 86.3%보다 높다. 보육서비스는 가

정 양육에 대응해 가정 내 돌봄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여성이 경제활동을 참여하거나 자녀 양육에 집중하는 선택의 결과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그림 4-5]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25~34세 가임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반면, 0~2세 및 3~5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성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 보육서비스 이용이 여성의 가정 내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4] 주요 국가의 아동 연령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



주: 1) 원자료는 「Education at a Glance 2018」에 보고된 2016년 기준이고, OECD 가입국을 중심으로 추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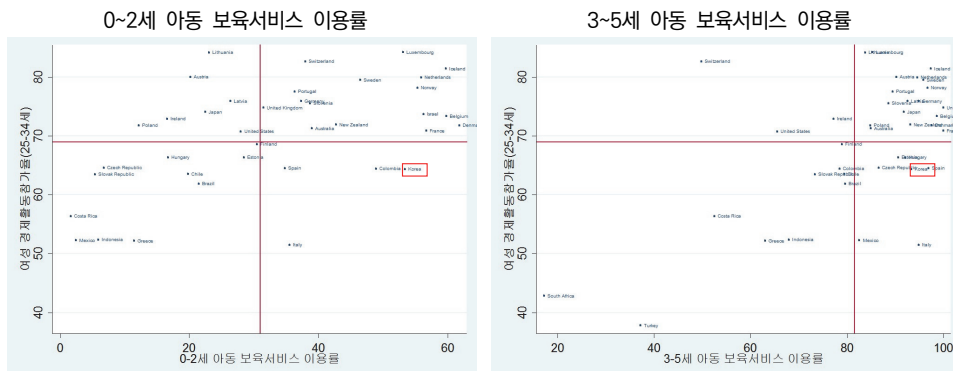
2) 대한민국의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53.4%이고, 3~5세 아동 이용률은 93.4%임.

3) OECD 평균 0~2세 아동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33.2%이고, 3~5세 아동 이용률은 86.3%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8. 12. 10. 인출)

[그림 4-5] 주요 국가의 아동 연령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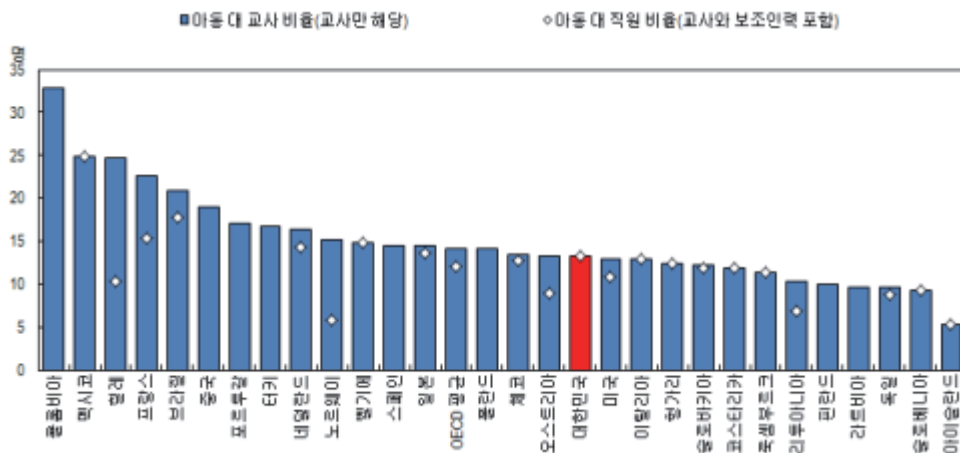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8. 12. 10. 인출)



보육서비스(pre-primary education)의 질(quality)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아동과 교사의 비율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 그림을 보면 2016년 기준 보육서비스의 교사 대비 아동의 수는 13.3명으로 OECD 평균 14.2명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보조인력을 포함한 직원 대비 아동의 수는 여전히 13.3명으로 OECD 평균 12.1명보다 다소 많다. 우리나라의 보육서비스 현장에서 다양한 인력의 활용이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6] 주요 국가 보육서비스의 아동 대 교사 비율



주: 2016년 기준임.

자료: OECD Ratio of children to staff in pre-primary education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8-data-and-methodology.htm>에서 2018. 12. 10. 인출).

## 2. 주요 국가의 아동정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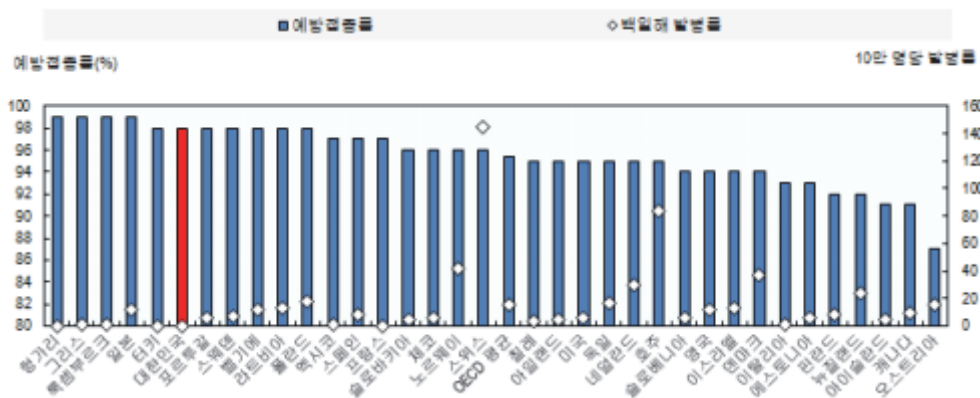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주요 국가의 정책 노력 구조에 이어 여기에서는 아동정책의 성과를 국제 비교 가능한 지표를 활용해 확인한다. 우선 신생아 및 후기신생아를 포함하는 영아 사망률의 경우 한국의 지표값은 2.8%로 OECD 평균 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동 예방접종률 또한 98% 수준으로 OECD 평균 95.4%보다 양호한 수준이다.

Deaths per 1000 livebirths

■ 신생아 사망률 ■ 특기신생아 사망률

국가	신생아 사망률	특기신생아 사망률
브라질	8.5	14.5
멕시코	7.5	12.5
터키	7.0	10.0
중국	6.0	9.0
인도네시아	5.5	6.5
미국	4.0	5.5
케냐	3.5	5.0
그리스	3.0	4.5
독일	2.5	4.0
프랑스	2.5	3.5
영국	2.5	3.5
이탈리아	2.5	3.5
스페인	2.5	3.5
스웨덴	2.5	3.5
핀란드	2.5	3.5
노르웨이	2.5	3.5
덴마크	2.5	3.5
아일랜드	2.5	3.5
네덜란드	2.5	3.5
벨기에	2.5	3.5
오스트리아	2.5	3.5
스위스	2.5	3.5
룩셈부르크	2.5	3.5
호주	2.5	3.5
뉴질랜드	2.5	3.5
이스라엘	2.5	3.5
일본	2.5	3.5
대한민국	2.5	3.5
미국	2.5	3.5
캐나다	2.5	3.5
영국	2.5	3.5
프랑스	2.5	3.5
독일	2.5	3.5
이탈리아	2.5	3.5
스페인	2.5	3.5
스웨덴	2.5	3.5
핀란드	2.5	3.5
노르웨이	2.5	3.5
덴마크	2.5	3.5
아일랜드	2.5	3.5
네덜란드	2.5	3.5
벨기에	2.5	3.5
오스트리아	2.5	3.5
스위스	2.5	3.5
룩셈부르크	2.5	3.5
호주	2.5	3.5
뉴질랜드	2.5	3.5
이스라엘	2.5	3.5
일본	2.5	3.5
대한민국	2.5	3.5

[그림 4-8] 주요 국가의 아동 예방접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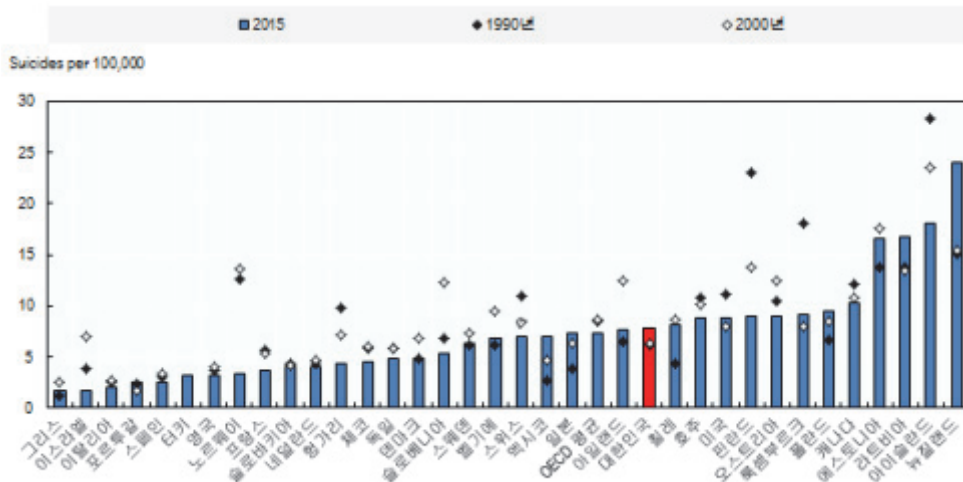


이 장의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아동 대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중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한 아동의 수로 측정하는 아동의 상대 빈곤율은 OECD 평균 11.8%의 절반에 가까운 7.1%에 불과하다. 이 수치는 덴마크(2.9%), 핀란드(3.7%), 슬로베니아(7.0%)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아동의 낮은 빈곤율은 저소득층의 출산 기피 행태를 반영하는 한국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을 근간으로 함께 해석해야 한다.



[그림 4-10] 주요 국가의 청소년 자살률

(단위: 15~19세 10만 명당)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8. 12. 10. 인출)

다음은 교육(Education), 취업(Employment), 훈련(Training)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층의 비율로 측정하는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현황이다. 국내에서는 니트 통계를 공식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어 여기에서는 OECD의 주요 국가 통계와 대한민국의 개별 통계를 결합하여 분석했다. 다음 그림을 보면 비교 가능한 국가 중에서 터키의 니트 비율이 28.2%로 가장 높다. 이스라엘은 5.3%로 낮은 수준인 반면, 한국의 니트 비율은 18.9%로 추정되어 OECD 가입 주요국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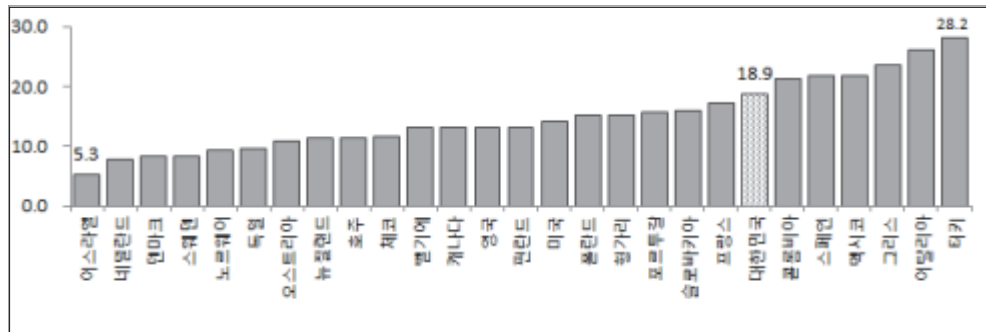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아동정책의 성과지표는 아동의 다차원적인 삶의 질이다. 이봉주 외(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대별 발달과업을 고려해 8세의 초기 아동과 12세의 중기 아동의 가족생활, 친구, 학교생활, 동네, 신체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구성하고 있다. 각 영역을 0~10점 범위의 척도로 측정하고 있어 아동의 삶의 질은 총 0~50점 범위의 점수로 환산된다. 한국 8세 아동의 삶의 질 총점은 42.41점이고, 12세 아동은 38.84점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 게다가 이 수준은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연령대별 1위 국가와 영역별 만족 수준을 비교하면 8세의 경우 가족생활 만족이 스페인 9.43점의 94.1%, 학교생활 만족은 93.0%, 친구 만족은 91.8%, 동네 만족

은 94.6% 수준인데, 신체의 몸 만족도는 87.2%에 불과하다. 12세의 친구 만족은 루마니아 8.95점의 93.6%, 가족생활 만족은 89.8%, 동네 만족은 85.6%, 학교생활 만족은 80.7%, 신체 만족은 73.1%로 전반적인 수준이 더 낮아졌다. 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아동의 신체 만족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1] 주요 국가의 15~29세 청년 니트(Net)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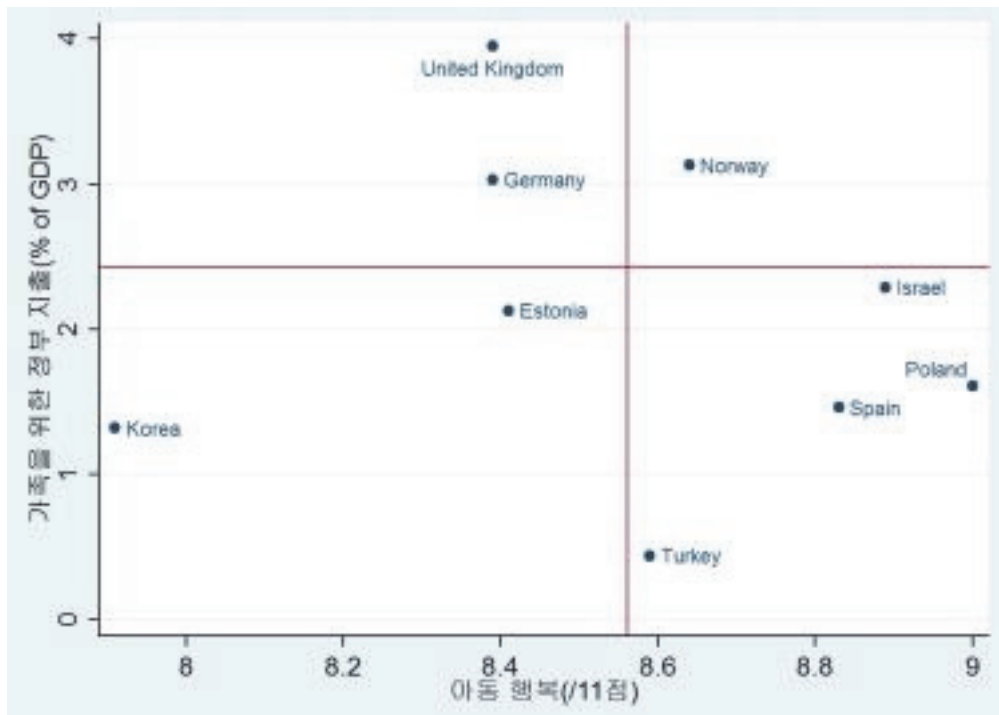
(단위: %)



### 3. 주요국의 아동정책 노력과 아동의 행복

국민의 행복은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성과다(Veenhoven, 2002; 김미곤 외, 2018). 앞서 살펴본 아동정책 노력이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요 정책 성과의 국제 비교와 함께 아동들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sup>19)</sup>

[그림 4-13] 주요국의 아동정책 노력과 아동의 행복 수준



주: 1) 가족을 위한 정부지출은 [그림 4-2] 현금 및 현물 급여의 합이고,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인 삶에 대해 얼마나 행복한가요?(How happy are you with life as a whole)”의 질문에 대한 1~5점 척도를 10점으로 환산한 응답의 평균임.

2)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X축 및 Y축의 실선은 각각 아동의 삶의 만족도(OECD 가입국 중 조사 대상 국가)와 가족을 위한 정부지출(OECD 가입국 전체)의 평균값임.

자료: (가족을 위한 정부지출)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8. 12. 10. 인출); (아동의 삶의 만족도) Rees, G., Andresen, S. & Bradshaw, J. (eds) (2016, p. 13) *Children's views on their lives and well-being in 16 countries: A report on the Children's Worlds survey of children aged eight years old, 2013-15*. York, UK: Children's Worlds Project(ISCWeB).

19) Clark et al., (2018, pp. 3-5)은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성인의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주요 지표인 '삶의 만족(life satisfaction)'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에 대해서는 행복감과 같은 기분을 질문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은 주요국의 아동정책 노력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정부지출과 아동의 행복감을 비교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가족을 위한 정부지출도 낮은 수준이고, 아동의 행복감도 OECD 가입국 중 조사 대상 국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영아사망률, 예방접종률, 상대빈곤율 등 정부 정책의 관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투입(input) 대비 성과(output)의 성격을 보이는 일부 지표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자살률, NEET 비율, 아동의 다차원적인 삶의 질 등 정책 성과를 통해 드러나는 최종 결과(outcome)로서의 지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다음의 그림은 이러한 역설적인 현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며, 과거 아동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 제2절 주요 체제전환국의 아동정책 현황

체제전환국은 1990년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를 말한다. 이 국가들은 체제전환기를 거쳐 인구, 무역과 외환 체제 등을 변환하면서 경제성장(정형곤 외, 2014)과 삶의 질 개선(정해식 외, 2018)을 보인 바 있다. 이 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체제전환국인 헝가리는 1996년 5월에, 폴란드는 같은 해 11월에 OECD에 가입하였고,<sup>20)</sup> 2004년에는 2002년에 발효된 유럽연합에 가입하였다.<sup>21)</sup> 국제기구에 가입하면서 이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는 유럽연합 복지 체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민기채, 2014; 정홍모, 2007). 하지만 연금 부문의 개혁과 같이 은퇴자에게 유리하고 여성과 가족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에 불리하게 조정되는 등 복지제도의 역할이 후퇴했다는 비판도 있다(문진영, 2008; 윤덕희, 2011; 윤성중, 김윤정, 2017).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2000년 이후의 가족을 위한 사회지출을 보면 헝가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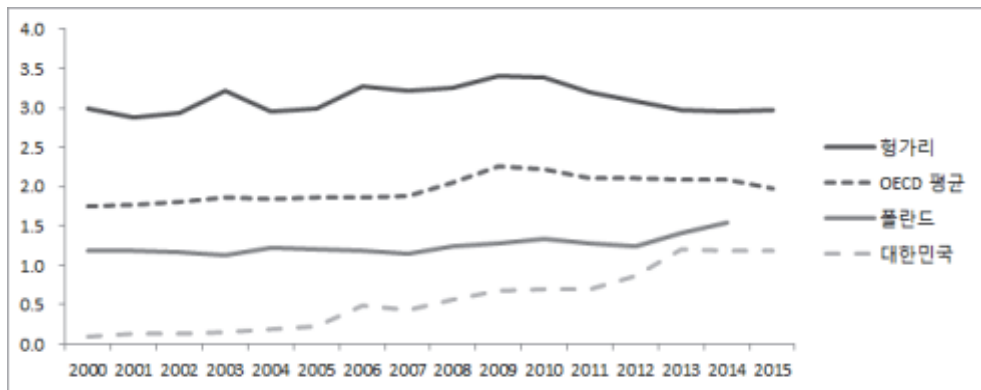
20) 우리나라도 같은 해 12월에 OECD에 가입하였다(<http://www.oecd.org/about/membersandpartners/list-oecd-member-countries.htm>에서 2018. 12. 10. 인출).

21) 1958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의 6개 유럽 국가가 경제적 협력을 체결하였으나,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2002년 발효되었다. 헝가리와 폴란드를 포함한 28개 가입국의 가입 시점은 홈페이지([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tab-0-1](https://europa.eu/european-union/about-eu/countries_en#tab-0-1)에서 2018. 12. 10. 인출)에서 확인하였다.

2000년 GDP 대비 3.0%로 OECD 평균 1.8%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까지 유지된다. 반면 폴란드의 가족을 위한 사회지출은 2000년 GDP 대비 1.2%로 OECD 평균에 비해 다소 낮지만, 우리나라의 0.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2014년에는 GDP 대비 1.5% 수준으로 나타나 미세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사회지출 투자는 2015년까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4] 주요 체제전환국의 가족을 위한 사회지출 수준

(단위: % of GDP)



주: 비교 대상 국가의 비교가 가능한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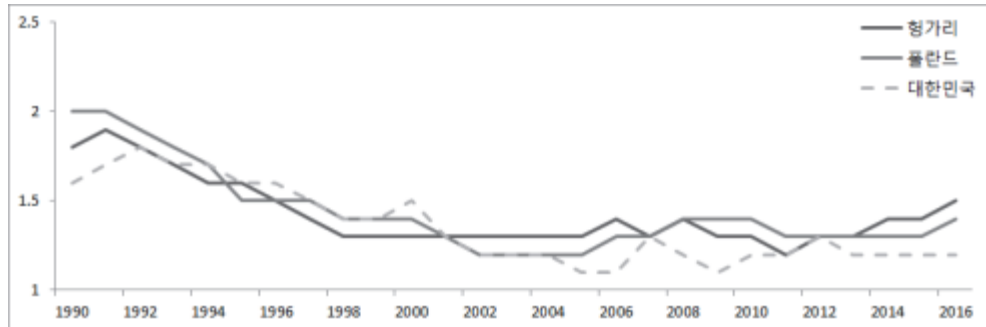
자료: OECD(2018), 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indicator). doi: 10.1787/8e8b3273-en(2018. 12. 10. 인출)

이 국가들 역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1990년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은 2명이었으나, 1990년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02년 1.2명까지 줄었다. 헝가리의 합계출산율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데, 1990년 1.8명에서 1998년 1.3명으로 줄어들고, 2013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저출산 경향이 지속되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헝가리는 2014년, 폴란드는 2016년 이후 약간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보다 중장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고려하면 최근 헝가리와 폴란드의 적극적인 가족정책 투자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15] 주요 체제전환국의 합계출산율

(단위: 명)



주: 15~49세 여성의 평균 출산율임.

자료: OECD(2018),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2018. 12. 10.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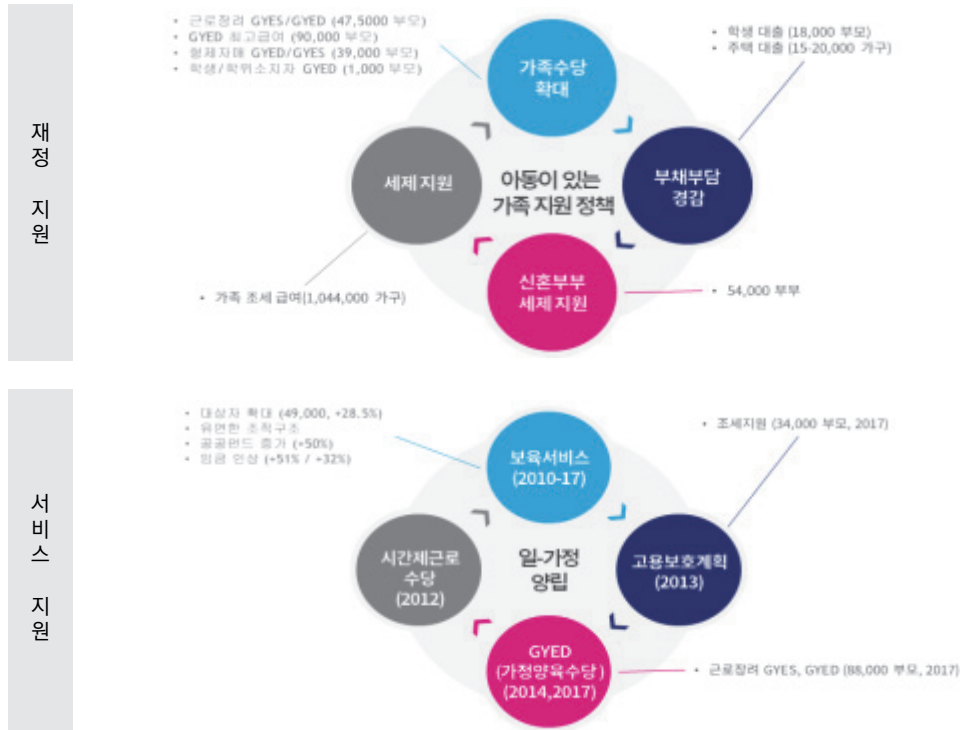
## 1. 헝가리의 아동정책 현황

### 가. 아동이 있는 가족을 위한 헝가리 정부의 역할

헝가리 인적자원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Ministry of Human Capacities, 2018, 내부 자료) 헝가리의 출산율은 2011년 1.23명 수준에서 2017년 1.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맥락과 함께 헝가리의 가족정책 분야 정부지출도 2011년 4.0%에서 2018년 4.7%로 지속적인 확대 경로에 있다.

헝가리의 가족 및 아동 양육 관련 정책은 아동이 있는 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 일과 삶의 조화 지원, 주거 지원, 빈곤 정책, 수당으로 구성된다. 다음 그림은 헝가리 인적자원부(Ministry of Human Capacities)의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정책 구조로, 재정 지원은 가족수당, 가족 및 신혼부부 조세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다. 서비스 지원은 보육서비스와 양육수당 양육자의 고용 보호, 시간제 근로자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16] 헝가리의 아동가족 정책 구조



자료: Ministry of Human Capacities. (2018). 내부 자료 재구성.

## 나. 아동이 있는 가족 지원 정부 프로그램

헝가리의 시립 유치원은 생후 20주 이상 아동이면 등록이 가능하나, 실제 유치원에 등록된 아동은 최소 2세 이상이다. 헝가리는 어린 아동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없으며, 어머니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을 선호하도록 사회정책이 형성되어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유치원에 등록된 아동의 20%만이 2세 미만이었고, 전체 유아원에서 주간 돌봄을 제공하는 오직 8%만이 3세 미만의 아동이다. 이런 시스템의 기원은 처음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된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머니들은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를 유예하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사회적 경제 이념에 따라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이 있었고, 실업이 용인 불가능하게 간주되었다. 사회주의 시대에 제공되던 복지

수당은 정권이 바뀌면서도 유지되었고, 현재 헝가리 가족정책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다. 다만,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되었다.

헝가리에서는 여전히 3세 이하의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가 있는 여성은 출산 후 몇 년 동안 노동시장 참여를 유예하는 데 허용적이다. 이 기간 동안 가족은 네 가지 형태의 가족수당을 지원받는다. 이는 아동의 연령과 모(母)의 경제활동 경험에 따라 결정된다.

즉 아동의 월령이 0~6월이고 모가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전 소득(previous earnings)의 70%를 보장하되 상한액이 있는 영아양육수당(Baby-care Allowance, CSED)을 지급한다. 아동이 6~24월령이며 모가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한액 없이 이전 소득의 70%를 보장하는 아동양육급여(Childcare Benefit, GYED)를 지급한다. 24~36월령의 아동과 0~36월령의 아동이고 모가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부터는 정액의 아동양육수당(Childcare Allowance, GYES)을 지급한다. 그리고 3~8세 아동의 경우에는 가정 내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정액의 아동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수당은 여성 평균 급여의 40% 정도이다(Makay, 2015).

그 외에 헝가리 정부에서 구조화하고 있는 아동 및 가족 지원 정책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을 위한 식사 제공, 보육서비스 경비 지원, 주거 지원 등 현금·현물 급여, 보육서비스와 단기 보호 등의 기초적 복지서비스, 가족 같은 양육 체계, 초기 성인을 위한 후기 양육서비스와 지역 단위의 아동보호서비스 등이 있다(Ministry of Human Capacities, 2018. 내부 자료).

## 2. 폴란드의 아동정책 현황

### 가. 폴란드의 아동이 있는 가족정책 특성

폴란드의 가족정책은 유럽대륙형 비스마르키언 복지 체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민기채, 2014). 특히 지난 1년간 평균소득의 100% 수준을 제공하는 모성수당, 8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14세 미만의 아픈 자녀의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수당, 저소득 아동가구를 위한 가족수당, 출산 일시금, 부모 휴가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돌

봄 부담에 대한 현금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모성수당, 모성휴가, 부성수당, 부성휴가, 돌봄수당 등이 소득 비례에 근거해 기여금으로 보장되는 사회보험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가족수당, 출산 일시금, 부모휴가 추가 지원 등은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조세로 보장되는 등 가족정책에서도 사회보험적 특성이 강력하다.

최근 폴란드의 가족정책 전달체계를 보면 2015년 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olicy)가 ‘가족’이라는 추가적인 구성 요소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변화가 아니며 ‘가족’이 노동사회정책부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가 된 것이다. 정부 정책을 통해 모든 발달 단계에서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시설의 발전을 통해 육아휴가부터 신생아 돌봄을 지원한다. 매달 ‘Family 500+’ 프로그램을 통한 재정적 지원과 ‘Good Start’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교육 지원을 주목할 만하다.<sup>22)</sup>

## 나. 아동이 있는 가족 지원 정부 프로그램

### 1) The 500+ family

Family 500+는 2016년 4월부터 시행된 폴란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 프로그램으로 가구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매달 500즈워티<sup>23)</sup>를 수당으로 둘째 아이부터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 이전에는 가족수당 법률에 의해 아동이 있는 가정 중에서 가족 1인당 소득이 674즈워티 미만이거나 장애 아동이 있는 경우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95즈워티, 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24즈워티, 18세 이상 24세 미만 아동에게 월 135즈워티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Family 500+ 도입 이후 선정 기준이 2명 이상 자녀이고, 최소 6개월 이상 폴란드 노동 허가 거주증을 소유하는 것으로 대폭 완화되었고 급여 수준도 인상되었다. 특히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월 800즈워티<sup>24)</sup>를 지원받는다.

폴란드 내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면서 2016년 4월 1일부터 보면

22) <https://www.gov.pl/web/rodzina/>에서 2018. 12. 6. 인출.

23) 1즈워티는 300.19원에 매매되고 있다. 500즈워티는 한화로 15만 원 정도 수준이다(<https://www.kebhana.com/cont/mall/mall15/mall1501/index.jsp>에서 2018. 12. 10. 인출).

24) 한화로 24만 원 정도이다.

적 아동수당 프로그램으로 Family 500+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에 의해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500즈워티를 부모, 보호자, 법적 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다. 가구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의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되 가족 1인당 순소득이 월 800즈워티 미만인 저소득층은 첫째 자녀부터 지급하며, 연간 최대 6000즈워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교육 지원은 장기적인 지원으로 이뤄진다. 제도 도입 이후 2년 정도 경과되면서 소비가 다소 증가하는 등 제도의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수급액을 부채 상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등 단기간의 공식적인 정책 효과 분석은 미미한 수준이다.

## 2) Good Start

‘Good Start’ 프로그램은 폴란드 아동의 교육을 위한 투자 프로그램으로 학교를 시작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회에 한해 300즈워티를 지급한다. 가족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60만 명의 학생을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Family 500+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도 행정사무소나 사회복지센터 또는 Good Start를 지원하는 부모의 거주지에 적합한 지역 단위 조직에서 시행하는데, 이 기관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수당을 지급하는지는 부모가 지자체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Good Start 프로그램의 지원자를 받는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위탁 가정의 아동은 지역 가족지원센터를 통해 Good Start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 3) 기타 관련 가족정책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정책인 Maluch 프로그램은 유아원, 놀이방, 탁아소 등 3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양육시설의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양육시설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용자를 지원받게 된다. ‘Toddler+’는 1년 단위 프로그램이다. Toddler+ 프로그램의 목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 놀이방, 탁아소, 장애아동 및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아

동을 위한 시설에 대한 지역적, 재정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sup>25)</sup>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3명 이상의 가족에게 보육서비스 할인과 추가적인 권리를 제공하는 Big Family Card는 공공시설 외에도 사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제3절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는 자녀 출산과 여성 고용률, 아동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등과 같은 경제적, 철학적, 효용적 측면에서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정에 따라 아동에 대한 성과 역시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영미 국가(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들을 중심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와 일가족양립정책 등을 고찰해 왔다. 최근에는 북유럽 국가(스웨덴, 덴마크 등)와 유럽대륙 국가(프랑스, 독일 등)를 중심으로 아동수당의 도입과 방과후돌봄 체계에 대한 사례 검토 연구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국가들은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가족과 사회에 대한 정책 방향과 범시민적 공감대에 근거하여 연차별 계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사례들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체제전환국은 보육 및 의료서비스의 보편화 기조 속에서 체제 전환에 따른 시장화의 영향을 맞이하였고, 대외적인 경제 압력과 정책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모색해 왔다. 국가별 경험과 역사의 특이성, 유럽연합 가입 이후 공통적으로 받고 있는 대외 시장화 압력, 그 속에서 무한 경쟁 시대와 출산율의 감소라는 범지구적, 신사회적 위험에 노출됐다는 측면에서 이 국가들에 대한 아동정책의 고찰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다만, 이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이와 교육 체제의 차이 등을 반영하면서 아동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언어의 한계와 사회문화적 특성의 상이

25) <https://www.gov.pl/web/rodzina/programy-i-projekty-program-maluch>에서 2018. 12. 6. 인출.

함을 기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아동정책에 대한 사례 연구는 일정한 분석 틀에 근거하여 국가별 다양한 정책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질적 분석 방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OECD 기준에서 아동정책과 가족정책을 분리할 수 없고,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출을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연구에서도 아동정책은 아동에 대한 직접 지원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OECD는 급여의 유형을 현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현물로 구분한다. 프로그램 유형은 유아교육 및 보육, 방과후돌봄, 산전후휴가 등 일·가족양립 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아동에 대한 정책의 대부분은 학교 체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 지출 및 교육 체계에 대한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해외 사례 연구에서는 이러한 통계를 기반으로 각국의 발전 경로와 복지 체제, 학교와 마을의 연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계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 제 5 장

## 개선 방안 논의

제1절 차년도 평가 개선 방안

제2절 차년도 시행계획 작성 및 평가(안)



## 제1절 차년도 평가 개선 방안

「아동복지법」 제7~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제7조),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제8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받아 종합·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이러한 법에 근거하여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종합실태조사’를 2013년에 실시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였다(2014년 2월). 2015년에는 공청회(1회) 및 지역 순회 토론회(2회)를 통해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였다. 2015년 5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와 함께 2016년에는 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2016년에 처음 시행되었다. 최초 평가임을 감안하여 2016년에는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시범 평가를 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는 ‘중앙평가단’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지역평가단’이 하고,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 1. 중앙부처

2016년 중앙부처에 대한 평가는 부처별로 제출한 2015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의 영역별 종합적 평가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평가는 ① 추진 실적 제출, ② 추진 실적 평가, ③ 평가 결과 환류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당초 평가계획에서는 부처에서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활용하

여 평가를 하고, 추가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표 5-1〉 중앙부처 평가 절차-2016년(2015년 실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세부 내용
① 추진 실적 제출	각 부처에서 전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실적* 제출 *사업 목적, 추진 내용, 목표 달성률, 예산 내역 등
② 추진 실적 평가	영역별 단위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은 기획, 집행, 성과 분야로 구분
③ 평가 결과 환류	영역별 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하도록 함

2016년 중앙부처의 평가 결과 2015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은 계획의 집행은 양호하나 성과달성도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학습부진 아동이나 다문화 아동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 평가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만·정신 건강 등 생활습관 관리 등 건강 분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시범 평가 결과 중앙부처의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낮았다. 평가 결과가 환류될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명의 평가위원 중 4명이 아동 복지 전공이고, 1명이 건강 증진, 1명이 청소년 활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특정 영역에 치우쳐 있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6년 중앙부처의 평가 체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하였다. 먼저 중앙부처의 평가 절차 중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소명 절차를 추가하였다. 중앙부처는 시행계획 작성 시 확정된 예산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예산 요구안을 기준으로 예산을 작성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행계획 추진 실적 중 추진의 적절성 지표에 포함되는 예산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평가에서는 기존에 제출했던 시행계획 수립 시의 예산 항목과 예산 및 집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성과달성도 역시 익년 3월에 시행계획을 제출하기 때문에 실적을 미제출하여 감점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므로 서면 평가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한 차례 제공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다음으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평가 위원은 모두 13명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연구자 3명, 아동 복지 4명, 건강증진 2명, 통계 2명, 교육 복지 2명이었다. 중앙

부처 사업은 영역과 분야를 고려하여 1인당 10여개 사업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안전과 보건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증진되었고, 전통적인 복지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 부처의 사업에서 전 생애를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아동에 대한 고려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다.

〈표 5-2〉 중앙부처 평가 절차-2017년(2016년 실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세부 내용
① 추진 실적 제출	각 부처에서 전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진 실적* 제출 *사업 목적, 추진 내용, 목표 달성률, 예산 내역 등
② 추진 실적 평가	영역별 단위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기준은 기획, 집행, 성과 분야로 구분
③ 이의소명 신청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서*에 근거하여 부처의 이의 제기 및 소명 신청 *평가결과서는 평가위원별로 양식에 근거하여 작성한 서면 평가 결과임
④ 평가 결과 환류	영역별 평가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여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하도록 함

2017년 평가 결과 기획의 적절성은 여전히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성과달성도는 향상되었다. 이에 비해 예산 집행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평가와 달리 예산 집행도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2017년 평가는 평가지표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정량지표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평가 절차와 평가 내용의 질적 수준은 제고되었으나, 평가 자료 미비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명 등 재평가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평가위원의 피로감이 높았다. 예를 들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당시 새로운 평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평가 결과의 소명이 증빙 자료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였다. 특히 예산과 성과달성도 등 재정사업 평가와 유사한 평가지표가 활용되면서 부처 내 평가와 유사하다고 인식하여 평가 일정이나 평가지표의 근거 자료 제출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2018년 평가는 앞의 두 해 평가 경험을 반영하여 1) 평가 절차는 단순화하되 2) 평가지표의 엄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였다. 즉 평가 절차는 2017년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검토를 통해 예산 및 지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명만 수용하였다. 다음으로 단순 오기 및 평가 자료 미제출 등을 전년도에는 최대한 사유를 수용하였으나, 올해는 객관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미제출로 처리

하였다. 이러한 지표의 엄격한 적용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표를 포함하는 계획의 집행도와 성과달성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차년도 평가 절차(안)는 아래의 그림과 같다. 이미 2018년 12월에 차년도 평가지표 설명회를 통해 차년도 평가계획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3월까지 제출하고, 평가위원은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한다. 사전 검토는 예산과 성과달성도 등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열린 재정 홈페이지에 게시된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예산과 성과달성도를 확인한다. 이러한 절차를 수행한 후 사전 검토 결과는 공문을 통해 부처 담당자에게 일괄 송부한다. 이에 대한 소명자료는 6월까지 공문 및 이메일 등 공식적인 증빙 자료의 제출을 통해서만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앙부처는 최종 평가는 7월 중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명 절차는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 5-1] 차년도 중앙정부 평가 절차(안)



##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절차는 상당히 변화를 많이 겪었다. 기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 자료를 활용하고, 추가 요구 자료를 최소화하는 원칙은 중앙부처와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참여는 시도 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설명회의 참석 여부와 평가 자료의 제출, 컨설팅 등에서 적극적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업무에 대한 평균 근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평가 업무의 연속성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시도에서 최초로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해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등 분석 및 점점에 중점을 두고 기준에 따라 시범 평가를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평가 절차는 ① 시행계획 수립, ② 시행계획 평가, ③ 현장 컨설팅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016년에 이뤄진 2015년 실적에 대한 평가는 기획의 적절성(점), 절차의 적절성(20점), 계획의 집행도(10점)로 이뤄졌다. 이때 기획의 적절성(70점)은 ① 기본계획과의 부합성(20점), ②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여부(20점), ③ 영역별 사업 배치의 적절성(15점), ④ 핵심 사업 선정 여부 및 합리성(15점)으로 구성되었다. 절차의 적절성은 ⑤ 수립 절차의 적절성(15점)과 ⑥ 관계기관과의 협업 여부(15점)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집행도(10점)는 ‘국비보조사업 등 이행실적’으로 평가했다.

〈표 5-3〉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2016년(2015년 실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세부 내용
① 시행계획 수립	시도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지자체별 추진 방향, 특색사업 등 포함) 수립·실적 제출
② 시행계획 평가	시행계획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기획의 적절성, 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
③ 현장 컨설팅	시도별 평가 결과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하고,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하도록 함

이러한 평가는 ‘기획’에 초점을 맞춘 평가이므로 추가 자료의 제출이 거의 불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은 1차 연도에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2차 연도부터는 기본계획과의 부합성보다

도 이미 수립된 시행계획의 실행성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2차 연도 평가에서는 성과달성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이행 실적은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의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및 성과달성도에서 측정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실적을 별도로 파악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평가지표와 중복되거나 이행 실적 점검에 포함된 사업의 성과달성도만 제고하는 편의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평가에서는 기획의 적절성 배점(30점)을 감소시켰으며, 추진 방식의 적절성(20점)은 기준을 유지하였고, 성과달성도(50점)를 추가하였다. 기획의 적절성은 여전히 ① 기본계획과의 부합성(10점)을 포함하지만, ② 지역 목표와 전략의 수립(10점), ③ 특색사업의 선정(10점)을 포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비해 신규 지표인 성과달성도는 ① 아동복지예산 투입률(10점), ② 아동복지 전달체계 운영(10점), ③ 국공립 유아교육 및 보육 이용률(10점), ④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10점), ⑤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10점)으로 구성하였다. 성과달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국가사업(국비 100%),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국비·지방비 매칭), 지방이양사업(지방비 100%)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평가지표의 변경에 따라 2017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를 상반기 중 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수정·보완과 평가를 하였다. 평가 결과는 공문을 통해 송부하고, 신청에 따라 현장 컨설팅을 하였으며, 차년도 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12월 중에 실시하였다.

〈표 5-4〉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2017년(2016년 실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세부 내용
① 설명회 개최	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② 시행계획 작성	시도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지자체별 추진 방향, 특색사업 등 포함) 수립·실적 제출
③ (서면) 평가	시행계획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기획의 적절성, 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
④ 현장 컨설팅	시도별 평가 결과에 대해 현장 컨설팅 하고,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하도록 함
⑤ 설명회 개최	시행계획 평가 결과 보고 및 차년도 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2018년에는 추진 실적 양식 등의 변경 사항이 크지 않았으므로 전년도 설명회 자료에 근거하여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만, 업무 담당자의 변경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여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별도의 설명회를 상반기 중 개최하였다. 2018년 평가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서면 평가와 대면 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한 것으로, 모든 지자체가 대면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는 시행계획 추진 실적에 제출한 근거 자료의 확인을 위한 것이다. 현장 컨설팅은 전년과 동일하게 신청에 근거하여 하였으며, 평가 결과가 이미 송부된 이후에 실시했다.

〈표 5-5〉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2017년(2016년 실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세부 내용
① 시행계획 작성	시도에서 전년도 시행계획(지자체별 추진 방향, 특색사업 등 포함) 수립·실적 제출
② 평가 설명회 개최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설명회 및 자료 협조 요청
③ 서면 평가	시행계획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기획의 적절성, 절차의 적절성 등에 대해 평가
④ 대면 평가	추가 제출 자료의 미비, 현장 실사 시 확인 사항 등을 위해 대면 평가
⑤ 현장 컨설팅	시도별 평가 결과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하고, 향후 시행계획에 환류하도록 함
⑥ 설명회 개최	시행계획 평가 결과 보고 및 차년도 시행계획 작성을 위한 설명회 개최

차년도 평가 절차(안)는 다음 그림과 같다. 이미 2018년 12월에 차년도 평가지표 설명회를 통해 차년도 평가계획이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을 1월까지 제출하지만, 시행계획 추진 실적은 3월까지 수정 제출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이에 대한 서면 평가를 한다. 서면 평가는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자료와 공식적인 통계 자료, 예산 자료에 근거한다. 다만, 예산 자료의 확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e호조 예산이 수록된 원자료가 필요하다. 이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구분,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자체사업이 아동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의 내부 자료를 통한 통계 생산 등을 통해 서면 평가를 한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면 평가를 한다. 대면 평가는 추진 실적 자료의 근거 확인 및 추가 제출 자료에 대한 제출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에 의한 통계 자료의 대차 대조로 이뤄진다. 대면 평가까지 완료한 다음 평가 결과는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일괄 송부하고 이후 사전 신청에 따라 컨설팅을 한다.

다만, 차년도 평가지표 중 성과달성도의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2018년에 신규 도입된 아동수당 등의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포함 여부와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평가지표의 배점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성과달성도는 국가사업과 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sup>26)</sup> 등으로 구분하여 비례적으로 추출하였으나, 아동의 연령별, 욕구별 심층 분석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평가 방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지표의 신뢰성 및 적절성, 통계 수집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5-2] 차년도 지방자치단체 평가 절차(안)



26) 지방이양사업 중 경상적 수요의 아동복지비 사업은 총 10개로, 아동시설 운영, 결식 아동 급식(시군구), 가정위탁 양육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퇴소 아동 자립정착금,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사업이다(2005년 기준).

## 제2절 차년도 시행계획 작성 및 평가(안)

### 1. 중앙정부

차년도는 2018년과 2019년의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연도별 평가와 함께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에 대한 내용과 5개년 종합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는 2017년 시행계획 평가에서 활용된 지표와 배점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는 평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작성은 2017년 시행계획 작성과 동일하다. 다만, 2019년은 연도 말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 시점 등을 고려하여 2분기(6월) 혹은 3분기(9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2018년과 2019년 각 연도 시행계획 평가는 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 검토를 하고, 추가 실적 등 자료 작성을 보완하는 기존 평가 방식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에 따라 2018년과 2019년의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지표는 기획의 적절성(20점), 계획의 집행도(30점), 성과달성도(50점)로 구성된다. 이를 지표별로 살펴보면 기획의 적절성은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10점)’과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10점)’으로 구성된다. 이전 연도 시행 실적의 반영은 2017년의 시행 실적에 대한 부처 및 부서 차원의 평가를 바탕으로 차년도(2018~2019년) 계획에 반영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된다. 먼저 2017년 시행 실적이 좋은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 목표의 달성이 향상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2017년 시행 실적인 좋지 않은 사업의 경우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 모색이 2018년과 2019년의 사업 계획 및 예산 편성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2017년 평가에서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요소 중심으로 측정했다면, 2018년과 2019년 평가에서는 동일한 평가지표를 보다 엄격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중앙부처 사업의 대부분은 전년도 사업 집행에 대한 문제점 및 한계의 분석, 이에 근거를 둔 개선 방안의 모색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의 적절성은 해당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과 이의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중앙부처 사업의 대다수는 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 사업 수행자를 두고 있다. 이런 경우 중앙부처는 해당 지자체 및 민간 사업자의 성과를 단순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부처 보조사업은 단순히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및 기관의 실적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성과 달성은 결국 사업에 대한 기획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종래 기획의 적절성에 대한 느슨한 정성평가 형태를 벗어나 지표 중심의 다소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계획의 집행도(30점)는 ‘예산집행률(20점)’과 ‘추진계획 이행도(10점)’로 구성된다. 예산집행률은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투입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전년도 평가부터 배점이 확대되었다. 실제로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불용은 차년도 예산 삭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수요 예측과 전달의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2018년과 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역시 예산의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지표의 변별력이 크지 않다는 점과 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차년도 평가는 결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조사업의 실집행률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의 열린 재정은 세부 사업 단위만 공개하고 있으나, 세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추진계획의 이행도는 측정 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추진계획의 이행도는 사업 주체와 대상이 명확하고, 추진체계가 사업 이행에 적합한지, 이러한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의 실행이 가능한지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지표는 기획의 적절성에 제시된 사업 내용, 추진 전략의 적절성 지표와 일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차년도 평가지표에서 추진계획의 이행도는 사업의 이행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분석하는 정성평가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명확한 전달체계가 있는 경우 필요에 근거한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측정하며, 해당 사업을 이행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집행상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대표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와 재정사업 평가의 결과 보조사업에 대한 연장 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성과달성도는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10점)’,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10점)’, ‘성과지표 측정의 신뢰성(10점)’,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 정도(20점)’로 구성되었다.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및 목표치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기존의 예산과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즉 평가지표는 동일하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 평가지표 측정의 신뢰성은 평가지표의 측정 방식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 성과 측정이 신뢰할 만한 수준에서 제시되었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과지표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성과지표가 주관적이고 정성적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해야 한다. 특히 만족도 조사의 경우 표본 추출 및 자료의 분석 등이 신뢰할 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전 검토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는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년(2015~2019년) 후 달라진 아동의 모습’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는 1차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괄 영역과 4개의 영역(미래준비, 건강, 안전, 함께하는 삶)의 13개 지표로 구성된다. 총괄 지표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 사항 이행률 등 세 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의 성과지표는 아동 결핍 수준과 공동체 의식의 2개 지표로 구성된다. ‘건강한 삶’ 영역의 성과지표는 영유아 건강검진율,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15~19세 자살률 등 세 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안전한 삶’ 영역의 성과지표는 안전사고 사망자 수, 아동범죄 피해자 수, 재학대 판정률 등 세 개 지표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삶’ 영역의 성과지표는 빈곤 아동 삶의 만족도와 소년범 재범률의 두 개 지표로 구성된다. 다수의 지표는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 자료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 공식 자료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지표는 지난 5년간 개별 사업별로 측정할 때 정부의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사업에 대한 성과가 고려되지 못한다는 한계와 최근 도입되거나 확대된 아동수당과 방과후돌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정책 영향이 제한된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정부가 아동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의 성과지표를 일부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성과지표로 정부의 아동정책에 대한 재정 투자와 국민의 아동정책에 대한 평가(국민인식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역시 2018년과 2019년의 아동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연도별 평가와 함께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중앙정부 평가와 동일하게 연도별 시행계획 평가는 2017년 시행계획 평가에서 활용된 지표와 배점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는 평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작성을 위해 시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담당자에 대한 설명회를 사전에 열었다(2018년 12월). 이는 시행계획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작성은 다섯 가지 원칙에 근거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지역 여건에 근거하여 행복한 아동의 삶을 위해 수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지역 내 아동의 다양한 수요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사업의 나열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시군구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의 설정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하고, 단순 나열식에서 벗어나 주요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취합된 자료를 재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은 지역사회의 여건에 근거하므로 보조사업을 단순히 나열할 필요가 없다. 즉 자체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 및 보건 사업 중 아동정책 사업의 비중을 살펴보거나, 아동정책 추진체계의 연계, 재정 지원 방식 등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셋째, 지역 여건 및 아동 수요·공급이 측정 가능한 통계치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하여 정책의 목표 및 성과 달성이 근거 기반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신규 및 시범사업 도입 시 계량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한다면,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사업 효과성을 제고하고 추가적인 예산의 편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본사업의 도입 및 확대에도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은 참여 민주주의의 근거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즉 아동과 학부모, 민간 전문가와 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

다.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균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거나 지역사회의 돌봄 기관 등을 이용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청과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시 시설 지원 및 가족 지원,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보호가 종료된 아동, 저소득 아동과 일반 아동,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다문화 아동 등의 욕구를 파악하여 균형 잡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시행계획 작성 양식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행계획의 비전과 목표는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부합한 공통의 비전과 목표를 고려해야 하나, 지역 여건 및 현황에 근거하여 지역별 목표 및 전략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행계획의 작성 중 제일 앞에 위치하지만, 사실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요약이므로 제일 마지막에 작성하여 합목적성을 제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지역 및 아동 현황은 지역 여건 및 아동의 주요 현황에 근거한 영역별 사업 계획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아동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하여 만 18세 미만 아동, 주요 연령대 아동의 비율 등을 제시하고, 가구 유형별·욕구별 아동의 수 혹은 비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내 교육청, 학교, 이용 기관, 생활시설 등 아동정책 관련 기관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정책 추진 방향은 아동정책에 포함되는 자체사업의 발굴 및 선제적 투자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조사업과의 관계, 자체사업의 필요성 등이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정책에 포함되는 전 사업은 영역별로 구분하고, 영역별 공통예산(보조사업)과 자체예산(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또한 보조사업은 보조금과 보조금에 대한 대응 지방비, 순수 지방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이 중 주요 평가 대상은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과제이다. 특색사업은 해당 시도의 아동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순수 지방비 사업 중 선정해야 하고, 왜 선정했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정책 수립 절차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투명한 의사 수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 및 학부모, 민간 전문가 및 시설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정책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가급적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과제별 시행계획의 작성은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영역별 수립 방향과 추진에 초점을 두고 제시되어야 한다. 영역별 추진 방향은 해당 영역 계획 수립의 방향성으로, 전년도 추진 성과가 충분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추진체계 및 관리 방안은 정책 수혜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다양한 전달체계 간 연계 및 협력, 사업의 관리 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사업별 과제는 5대 영역-중심 과제-세부 과제 순으로 작성하되 시군구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동일 사업의 경우 시도에서 취합 및 정리하여 단일 사업에는 동일 번호를 부여한다. 사업은 신규와 기존으로 구분하고, 재원은 시도와 시도-시군구 매칭, 시군구 등으로 구분한다. 이와 함께 사업 개요, 추진 내용, 예산 현황, 성과지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평가는 1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5년(2015~2019년) 후 달라진 아동의 모습'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시도별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나 일부 자료는 시도별 점수가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사업의 일부가 시도교육청 및 지방이양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재정 여건과 아동 인구의 비중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에서 지난 5년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던 사업에 대한 5년간의 평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국내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13).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15-2019).
- 김미곤, 이태진, 송태민, 우선희, 김성아. (2018). 20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곤, 신영석, 여유진, 박승희, 변재관, 박이택, 박미정, 김성아, 조한나. (2018). 미래 사회정책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진영. (2008). 동유럽(CEE) 국가의 사회적 배제 현상과 복지체제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6(1): 47-77.
- 민기채. (2014). 폴란드 복지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이전, 사회주의 시대, 사회주의 이후 비교. 국제지역연구, 18(4), 55-83.
- 보건복지부. (2017). 아동사업안내 II. 세종: 보건복지부.
- 오운섭, 강지원, 이예나. (2017). 2016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연구. 세종: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희희. (2011). 동유럽의 복지국가 개혁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29(2), 163-192.
- 윤성종, 김윤정. (2017). 헝가리 복지정책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결과. East European & Balkan Studies, 41(3), 245-262.
- 윤혜준, 민숙원, 유한구, 금예진. (2017). 우리나라 청년 니트 현황 분석과 시사점. KRIVET Issue Brief. 제135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유조안, 유민상, 최창용, 이주연, 김윤지, 박호준. (2017). 2017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III.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정은희, 백승호, 김성아. (2018).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해식, 강신욱, 김동진, 김성아, 강미나, 김지혜, 정영호, 안주엽, 오선정, 채창균, 윤혜준, 김지선, 김종호. (2018).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정형곤, 김병연, 이재완, 방호경, 홍이경. (2014).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홍모. (2007). 체제전환국의 복지체제: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17(1), 71-99.

통계청 보도자료. (2018. 9. 19). 2017년 사망원인통계. 대전: 통계청.

통계청 보도자료. (2018. 11. 28.). 2018년 9월 인구동향. 대전: 통계청.

## 국외문헌

Makay, Z. (2015). Family Support System-Childraising-Employment. in Monostori, J. Öri, P. & Spéder, Zs. (eds.) *Demographic Portrait of Hungary 2015*. Buhapest: HDRI

Rees, G., Andresen, S., & Bradshaw, J. (eds) (2016, p.13) Children's views on their lives and well-being in 16 countries: A report on the Children's Worlds survey of children aged eight years old, 2013-15. York, UK: Children's Worlds Project (ISCWeB).

Rosen, H. S., & Gayer, T. (2010). *Public Finance*. McGraw-Hill Higher Education.

## 통계자료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 재정통계. <http://www.openfiscaldata.go.kr>에서 2018. 8. 18. 인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자료실. <http://lofin.mois.go.kr>에서 2018. 8. 2. 인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1세별 주민등록인구. <http://kosis.kr>에서 2018. 7. 16. 인출.

국립국어원. 우리말 샘. <http://www.korean.go.kr>에서 2017. 10. 10. 인출.

Clark, A. E., Fleche, S., Layard, R., Powdthavee, N., & Ward, G. (2018). *The Origins of Happiness: The Science of Well-Being over the Life Cours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OECD. Family benefits public spending (indicator). doi: 10.1787/8e8b3273-en (2018. 12. 10. 인출)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18. 12. 10. 인출).

- OECD. Fertility rates (indicator). doi: 10.1787/8272fb01-en(2018. 12. 10. 인출)
- OECD Ratio of children to staff in pre-primary education (<http://www.oecd.org/education/education-at-a-glance-2018-data-and-methodology.htm>)에서 2018. 12. 10. 인출).
- OECD. Poverty rate (indicator). doi: 10.1787/0fe1315d-en(<https://data.oecd.org/in-equality/poverty-rate.htm>)에서 2018. 12. 10. 인출)
- OECD. Suicide rates (indicator). doi: 10.1787/a82f3459-en(<https://data.oecd.org/healthstat/suicide-rates.htm>)에서 2018. 12. 10. 인출)
- OECD. Youth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 (indicator). doi: 10.1787/72d1033a-en(<https://data.oecd.org/youthinac/youth-not-in-employment-education-or-training-neet.htm>)에서 2018. 12. 10. 인출)



---

## 부 록 <<

부록 1. 중앙부처 평가 양식

부록 2. 지방자치단체 평가 양식

부록 3.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



## 부록 1. 중앙부처 평가 양식

항목	평가	답변 근거 종합												
기획의 적절성	**점 /20점	○ (이전 연도 시행 실적 반영) - 2016년도 추진 실적의 성과 - 2016년도 추진 실적의 한계 및 문제점												
		○ (사업 내용과 추진 전략 연계) - 사업 목적, 사업 내용, 기대 효과												
계획의 집행도	**점 /30점	○ (예산집행률) ※ 2018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2017년 예산(a), 집행(b) 작성 ※ 2017년 시행계획에 2017년 예산(a) 작성 여부 파악												
		<table><tr><th rowspan="2">예산 항목명</th><th colspan="2">2018년 시행계획</th><th>2017년 시행계획</th></tr><tr><th>2017년 예산(A)</th><th>2017년 집행(B)</th><th>2017년 예산</th></tr><tr><td></td><td>-</td><td>-</td><td></td></tr></table>				예산 항목명	2018년 시행계획		2017년 시행계획	2017년 예산(A)	2017년 집행(B)	2017년 예산		-
예산 항목명	2018년 시행계획		2017년 시행계획											
	2017년 예산(A)	2017년 집행(B)	2017년 예산											
	-	-												
성과 달성도	**점 /50점	○ (추진계획 이행도) - 추진계획의 사업 주제, 사업 대상, 추진체계												
		○ (지표1) 지표명 작성 예) 핵심 역량 규정 및 반영 전략 수립												
		○ 성과지표 선정의 적정성: 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내용,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사업 목표, 사업 내용, 기대 효과가 제시되면 충분으로 판단												
		○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전년도 예산의 추이와 전년도 실적 추이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2017년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 2018년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을 확인하여 모두 제시되면 충분으로 판단												
		○ 성과지표의 신뢰성: 측정 산식과 자료 출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측정 산식이 수식(계량 지표) 혹은 문장(정성지표)으로 객관적으로 제시되었는지, 자료 출처(실적 자료, 만족도 조사 등)가 명확한지 기준으로 충분 여부 판단												
		○ 성과지표의 달성도(%): 2017년 기준 성과지표의 목표와 실적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충분 여부 판단												
		※ 지표가 여러 개 있는 경우 동일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 가중치의 합은 1이 됨.												

## 부록 2. 지방자치단체 평가 양식

항목	평가	평가기준																	
기획의 적절성	**점 /10점	※ 정성평가: 10(점)  ○ 지역별 목표 및 전략 수립 부합: 점수/10(점) - 지역별 ①여건과 ②목표, ③전략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 세 개의 지표 구분하여 제시 9점, 셋 중 둘만 제시 7점, 셋 중 하나만 제시 5점, 모두 미제시 0점 - 각 지표 간 연계 및 부합 정도에 따라 0~2점 추가 - 단, 최소 점수 5점																	
		※ 정성평가: 10(점), 정량평가: 10(점)  ○ 수립 절차의 적절성: 점수/10(점) -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의견 수렴 실적 및 횟수 기술 - 공무원만 참석 0점,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 1점, 일반 주민 2점, 아동 및 학부모 참석 3점																	
추진 방식의 적절성	**점 /20점	<table><tr><th>① 주체</th><th>② 일시</th><th>③ 장소</th><th>④ 참석 대상</th><th>⑤ 행사명</th></tr><tr><td>○○시</td><td>2017. 2. 2. 17:00</td><td>시청 7층 공용회의실</td><td>공무원, 전문가, 시설 종사자</td><td></td></tr><tr><td>△△구</td><td>2017. 5. 5. 11:00</td><td>△△구립도서관</td><td>아동, 학부모</td><td></td></tr></table>	① 주체	② 일시	③ 장소	④ 참석 대상	⑤ 행사명	○○시	2017. 2. 2. 17:00	시청 7층 공용회의실	공무원, 전문가, 시설 종사자		△△구	2017. 5. 5. 11:00	△△구립도서관	아동, 학부모			
		① 주체	② 일시	③ 장소	④ 참석 대상	⑤ 행사명													
		○○시	2017. 2. 2. 17:00	시청 7층 공용회의실	공무원, 전문가, 시설 종사자														
		△△구	2017. 5. 5. 11:00	△△구립도서관	아동, 학부모														
○ 아동정책 추진체계 구축: 점수/10(점) - 시도 단위 2점(총점), 시군구 단위 8점(총점)으로 구분하고 구성 점수(4점)와 실적 점수(4점) 평가 - 시도 점수; b 구성=1점, 미구성=0점, c 실적=운영 1점, 미운영=0점 - 시군구 점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지자체 수))*4+((실적)/(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4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실적(서술)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지자체 수</th><th colspan="2">아동복지심의위원회</th><th rowspan="2">점수</th></tr><tr><th>구성</th><th>실적</th></tr><tr><td>○○시</td><td>1</td><td>b</td><td>c</td><td>/2점</td></tr><tr><td>시군구(계)</td><td>a</td><td>d</td><td>e</td><td>/8점</td></tr></table>	구분	지자체 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점수	구성	실적	○○시	1	b	c	/2점	시군구(계)	a	d	e	/8점
구분	지자체 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점수														
		구성	실적																
○○시	1	b	c	/2점															
시군구(계)	a	d	e	/8점															



항목

평가

평가기준

성과  
달성도

\*\*점  
/60점

※ 정량평가: 60(점)

○ 드림스타트 수혜율: 점수/10(점)  
- 드림스타트 구축: 드림스타트 구축도(5점)+드림스타트 수혜율(5점)  
단, 드림스타트 수혜는 '사례관리' 대상 아동만 포함(2017. 12. 31. 기준, 아동 수)

구분	드림스타트 구축			사례관리 아동 수	0~11세 취약계층 아동 수
	전담팀	전담 공무원 (팀장 포함)	전담 민간 인력		
○○시	a	b	c	d	e

※ 시도는 시군구 합산 자료임.

○ 국공립 유아교육·보육 이용률: 점수/10(점)  
-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합산  
- ((국공립 유치원 아동 수)+(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수)/(전체 유치원 아동 수+전체 어린이집 아동 수))\*10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국립	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전체
○○시	a	b	c	d	e	f	g	h

※ 시도는 시군구 합산 자료임.

○ 취학아동 방과후돌봄 이용률: 점수/10(점)  
- 취학아동에 대한 공적 방과후돌봄 제공 기관 이용률을 10점 만점으로 환산  
- ((공적 방과후돌봄 이용 아동 수)/(초등학생 수\*30%))

구분	중앙정부 재정 보조사업				초등학생 수*30%
	초등돌봄 교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	a	b	c	d	i

※ 시도는 시군구 합산 자료임.

○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점수/20(점)  
- 보호종료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 대한 자립 지원 실적(10점)과 디딤씨앗통장 실적(10점) 합산  
-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실적: (자립지원 수혜 아동 수/자립 지원 대상 아동 수)\*10  
- 디딤씨앗통장 실적: (월별 1만 원 이상 저축 아동의 연간 누계 수/월평 지원 대상 아동의 연간 누계 수)\*10

구분	요보호아동 수			수혜자 수			디딤씨앗통장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지원 대상아동 수	월평균 1만 원 이상 저축 아동 수
○○시	a	b	c	d	e	f	g	h

※ 시도는 시군구 합산 자료임.

항목	평가	평가기준																																							
성과 달성도		<div>○ 요보호아동 주거 지원: 점수/10(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호종료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공공 주거 지원 실적을 10점 만점으로 환산</li><li>- ((공공 주거 지원 수혜 아동 수)/(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의 보호종료아동 수))*10</li><li>- 보호종료아동 수가 0인 경우 평균 점수 적용</li></ul></div> <table><tr><th>구분</th><th>공공 주거 지원<sup>1)</sup> 수혜자</th><th>요보호아동 수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th><th>수혜율</th></tr><tr><td>○○시</td><td>a</td><td>b</td><td></td></tr></table> <div>※ 시도는 시군구 합산 자료임.</div>	구분	공공 주거 지원 <sup>1)</sup> 수혜자	요보호아동 수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수혜율	○○시	a	b																																
	구분	공공 주거 지원 <sup>1)</sup> 수혜자	요보호아동 수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수혜율																																					
	○○시	a	b																																						
기반 구축	*점 /10점	<div>※ 정량평가: 10(점)</div> <div>○ 국가공모사업 참여도: 점수/5(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아동 관련 국가 시책 사업에 공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 시도(2점)와 시군구(1점) 점수 합산</li></ul></div>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부처명</th><th colspan="2">신청</th><th colspan="2">선정</th></tr><tr><th>시도</th><th>시군구명</th><th>시도</th><th>시군구명</th></tr><tr><td>사업명</td><td></td><td>○○시</td><td>△△구, △△구</td><td>○○시</td><td>△△구, △△구</td></tr><tr><td>사업명</td><td></td><td>○○시</td><td>△△구, △△구</td><td>○○시</td><td>△△구, △△구</td></tr></table> <div>○ 아동친화도시 구축: 점수/5(점)<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인증을 위한 노력을 시도와 시군구로 측정하여 점수 합산</li><li>- 평가 인증(2점, 그 외 노력(1점)</li><li>- 모든 평가 자료는 2017년 당해 연도만 포함</li><li>- 평가 인증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와 내부 자료,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www.elis.go.kr), 예산 및 조직도는 지자체에서 제출한 공문에 근거하며, 근거 자료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li></ul></div> <table><tr><th>구분</th><th>시도</th><th colspan="2">시군구</th></tr><tr><td>아동친화도시 인증</td><td>인증 연도</td><td rowspan="4">△△구...</td><td>인증 연도</td></tr><tr><td>아동친화도시 조례</td><td>조례명</td><td>조례명</td></tr><tr><td>아동친화도시 예산 편성</td><td>2017년 예산</td><td>2017년 예산</td></tr><tr><td>아동친화도시 조직</td><td>2017년 조직도</td><td>2017년 조직도</td></tr></table>	구분	부처명	신청		선정		시도	시군구명	시도	시군구명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구분	시도	시군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인증 연도	△△구...	인증 연도	아동친화도시 조례	조례명	조례명	아동친화도시 예산 편성	2017년 예산	2017년 예산	아동친화도시 조직	2017년 조직도	2017년 조직도
		구분			부처명	신청		선정																																	
			시도	시군구명		시도	시군구명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사업명		○○시	△△구, △△구	○○시	△△구, △△구																																		
구분	시도	시군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인증 연도	△△구...	인증 연도																																						
아동친화도시 조례	조례명		조례명																																						
아동친화도시 예산 편성	2017년 예산		2017년 예산																																						
아동친화도시 조직	2017년 조직도		2017년 조직도																																						

### 부록 3. 2017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추진체계

#### □ 평가단

성명	소속	직위(급)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동훈	한림대학교	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장현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서보순	동의대학교	교수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제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시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정영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 □ 사업 관련 자문위원

- 박영숙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단장(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 조용남 드림스타트중앙지원단 단장(드림스타트, 다함께돌봄센터)
- 장화정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보호종료아동 및 요보호아동)
- 이경원 아동자립지원단장(보호종료아동 자립 및 주거 지원, 디딤씨앗통장사업)

#### □ 평가 관련 자문위원

-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손호성 교수(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오윤섭 연구 2팀장(감사연구원)
- 유민상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